

국민과 함께 하는
2004 쌀 협상

2004. 4

농림부 도서관



0001286



농림부



국민과 함께 하는 2004 쌀 협상

농림부 자료실
등록번호: 1286
등록일: 2004년 8월 24일
기증:

이 자료는 농업 관련 국제협상(UR/DDA)과 2004 쌀 협상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만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농림부 국제협력과(Tel : 02-500-1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 2004 쌀 협상의 이해

1. 쌀 관련 UR 협상 내용	7
2. 2004 쌀 협상의 성격과 여건	8
3. 2004 쌀 협상 추진 절차와 내용	9
4. 정부의 대응방향	10

II. 농업협상(UR/DDA) 및 쌀 협상

1. UR 협상과 쌀 협상	13
1) UR 협상 결과	13
2) UR 농업협상과 쌀 협상	14
3)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주요 내용	15
4) UR 농업협정 관세화 예외조치의 내용	18
2. DDA 농업협상과 쌀 협상	19
1) DDA 농업협상의 경과	19
2) 농업협상 세부원칙(Modality) 주요안 내용	20
3) DDA 농업협상과 2004 쌀협상	27

Ⅲ. 2004 쌀 협상 추진 절차 및 예상쟁점

1. 2004 쌀 협상 추진절차	31
1) 2004 쌀 협상의 성격과 여건	31
2) 2004 쌀 협상 추진절차	32
2. 2004 쌀 협상 시 예상 쟁점	34
1) 관세화 유예연장	34
2) 관세화	37

Ⅳ. 2004 쌀 협상 대응방향

1. 정부의 대응방향	41
2. 쌀 산업 종합대책	42
1) 쌀 산업 종합대책의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42
2) 쌀 산업 종합대책의 추진방안	44

V. 질의응답

63

VI. 부록

1. 주요 쌀 생산국 쌀 산업 현황	71
2. WTO구조	91
3. 119조 투융자 종합계획	94
4. UR 농업 협정문 부속서 5	97
5. 도하 각료회의 선언문	108
6. 관련통계	133

I 2004 쌀 협상의 이해

1. 쌀 관련 UR 협상 내용

WTO에 가입한 모든 나라는 UR 협상에서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만큼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자기 나라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였다. 이를 「관세화」라고 부른다. 이와 더불어 일정물량(국내 소비량의 3~5%)을 의무적으로 낮은 관세로 수입하도록 하는 조치(의무수입량)를 회원국들이 합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쌀은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외조치를 인정하였다. 우리나라 쌀은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높은 관세를 내더라도 수입할 수 없도록 10년간 특별 예외 조치를 인정받았다. 이를 「관세화 유예」라고 한다. 다만, UR 협상의 무역확대 취지에 따라 협정이 발효되는 95년에는 국내 소비량의 1%인 5만1천톤을 수입하고, 이를 점차 늘려 2004년에는 국내 소비량의 4%인 20만5천톤을 수입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UR 이후 10년째 되는 2004년에 쌀은 의무수입량인 20만5천톤만을 수입하면 되는 제한적 개방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05년 이후 관세화 유예 지속여부는 2004년 중 협상하기로 되어 있다(부속서 5 제8항). 관세화 유예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국이 수락가능한 수준의 추가양허를 하도록 되어 있다(부속서 5 제9항). 반대로 2005년 이후 관세화 할 경우에는 기준년도('86~'88) 관세상당치의 90%로 관세화하고 DDA 농업협상에서 결정되는 일반원칙에 따라 관세 감축이 이루어진다(부속서 5 제10항 및 첨부).

관세화 예외 인정조건(부속서 5 제7항)

- 해당품목의 수입이 '86~'88년 국내소비량의 3%미만
- '86~'88년 이후 수출보조금이 제공되지 않은 품목
- 생산제한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 개발도상국의 전통적 식생활에 가장 중요한 주식

※ 「부록 6.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5」 참조

2. 2004 쌀 협상의 성격과 여건

쌀 협상은 협정의 기본원칙인 관세화에 대한 “한시적 예외조치”의 시한만료에 따른 후속 협상이다. 외형상으로 쌀 협상은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는 DDA 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이나 내용상으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DDA 세부원칙(Modality) 협상에서 결정될 관세감축과 저율관세 수입물량(TRQ) 증량원칙, 이행계획서 제출 후 이루어질 양허협상에서의 개도국 지위유지 여부는 쌀 협상에서의 이해득실 분석과 대안선택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DDA 협상일정이 지연되어 2004년 중에 세부원칙(Modality)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쌀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모달리티(Modality)란?

무역협상 등에서 향후 협정이 실행될 방식을 정한 지침으로 관세 및 보조금 감축 방식, 감축률 등을 규정하게 됨.



3. 2004 쌀 협상 추진 절차와 내용

농업협정문에는 '이행 마지막 연도(2004년)에 특별대우(관세화유예) 계속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고 동 연도에 종결'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본, 대만, 이스라엘의 경우 관세화 전환 3개월 전까지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고 검증절차를 거쳤으나, 아직 관세화 유예 지속을 위한 협상 사례는 없다.

우리나라는 협상 개시 의사를 2004년 1월 20일에 WTO 사무국에 통보하였다. 미국, 중국 등 주요 이해당사국들과 4월 이후 본격적인 양자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3개월 검증절차를 고려하여 9월 말까지 협상을 종결할 예정이다.

2004 쌀 협상 절차

- (1) 우리나라가 WTO 사무국에 쌀 협상개시 의사통보 (1.20)
- (2) WTO 사무국은 우리 통보내용을 회원국들에게 통보
- (3) 관심국가는 90일내 협상참가 의사를 우리나라와 WTO 사무국에 통보
- (4) 관심국가와 양자협의
- (5) 협상결과를 WTO에 통보하고 회원국들로부터 3개월간 검증절차를 거침

2004년 쌀 협상의 주요 내용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량 증량 수준 및 유예 기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만의 협상 사례에서 보듯이 의무수입량 수입방법, 의무수입량 용도제한 문제 등도 유예조건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정부의 대응방향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관세화 유예 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국의 유예 요구조건이 과도하여 관세화 할 때 보다 쌀 산업에 더 불리한 경우에는 실리 확보방향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쌀 협상은 농업인, 농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토대 위에서 추진하되, 쌀 협상과 함께 국내 쌀 산업대책도 여론수렴을 통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협상(UR/DDA) 및 쌀 협상

1. UR 협상과 쌀 협상

1) UR 협상 결과

UR 농업협상의 결과 1995년 1월 1일 WTO가 출범되었다.
UR 협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세인하(시장접근분야)

- 농산물수입제한조치는 관세화(TB)하고 이를 매년 감축한다.
 - 우리나라의 쌀은 관세화 예외를 인정받아 10년간(1995~2004)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2004년 중 유예 연장 여부를 협상한다.
- 관세화된 품목에 대해 일정물량은 낮은 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등 저율관세쿼터(TRQ)를 제공한다.
- 개방이후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는 특별긴급관세(SSG) 부과를 허용한다.

보조감축(국내보조 및 수출보조분야)

- 국내보조는 생산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격지지 효과가 있는 감축대상보조와 직접지불 등 감축의무가 없는 허용보조 등으로 분류한다.
- 수출보조는 재정지원액과 물량을 일정기간 감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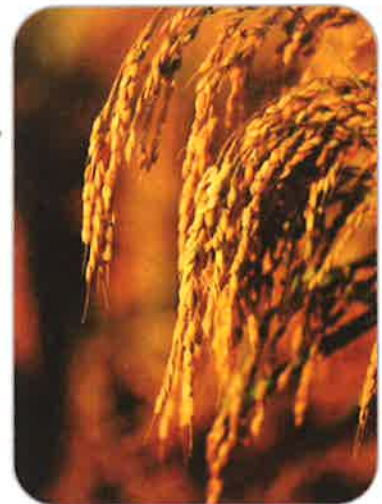
개도국 우대

- 감축폭을 완화하고 이행기간도 길게 하는 등 우대조치를 적용한다.

UR 협상시 개도국 우대 내용

		선진국	개도국
감 축 물	관세	평균 36%, 품목별 최소 15%	평균 24%, 품목별 최소 10%
	국내보조	20%	13.3%
	수출보조	36%(재정지출) 21%(물량)	24%(재정지출) 14%(물량)
	이행기간	6년('95~2000)	10년('95~2004)

※우리나라는 UR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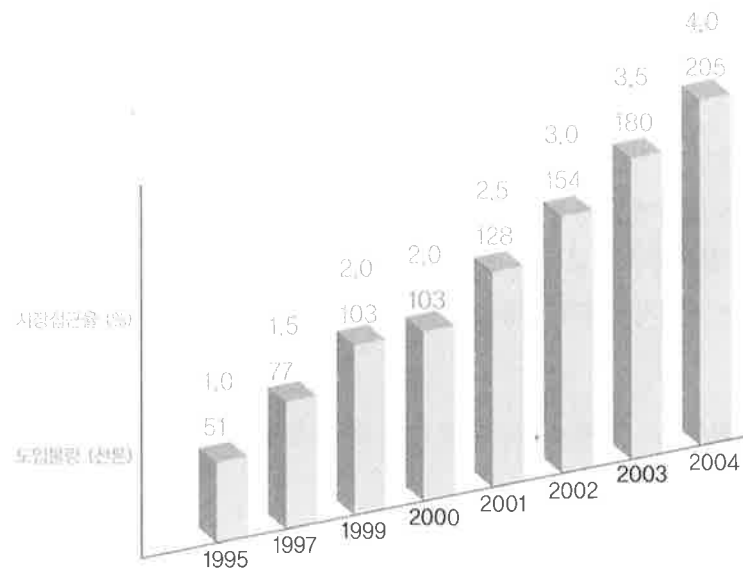
2) UR 농업협상과 쌀 협상

우리나라는 UR 농업협상에서 쌀에 대해 10년간 관세화를 이행하지 않는 대신, 매년 일정한 물량의 외국산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내용은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5항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1995년부터 일정 물량의 쌀을 수입해왔으며 이 양은 매년 증가하여 2004년에는 20만5000톤에 달한다.

또한 2005년 이후 관세화 유예 지속여부는 2004년 중에 협상하게 된다.

연도별 MMA 수입물량



3)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주요 내용

UR 농업협상에서 세계 각국은 시장접근분야의 근본 원칙으로 '포괄적인 관세화'에 합의하였으며 모든 비관세조치는 관세로 전환되었다(농업협정문 4조 2항). 여기서 포괄적(comprehensive)이라 함은 '예외 없는' 과 유사한 의미이다.

「농업협정문 부속서 5」는 포괄적 관세화의 특례조항으로서 특정조건 아래 관세화의 효력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포괄적 관세화에 대한 원칙을 합의하는 대신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별한 국내 사정을 고려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

「농업협정 부속서 5」의 골격은 일본과 미국의 접촉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이외에 다른 회원국이 이 조항을 이용하여 일부 품목의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 UR 협상의 기본 원칙이 손상될 것을 우려해 가능한 엄격한 부대조건을 첨부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조문화 되는 과정에서 다자화 성격을 갖게 됐으며 결국 일본과 우리나라 외에도 이스라엘과 필리핀이 이 조항을 원용하여 일부 농산물 관세화를 유예하게 되었다.

「농업협정문 부속서 5」는 조항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를 원용하는 품목은 식량안보 또는 환경보전 등의 NTC를 반영하는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NTC를 반영한 대표적인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의 NTC가 관세화 예외를 허용하는 명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

▶ NTC란?

Non-Trade concerns의 약자로 비교역적 기능을 말한다.

교역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농업이 지닌 고유한 역할을 의미하기도 하며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고용유지, 지역개발, 그리고 사회적 혹은 문화적 측면과 관련된 기능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같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EU,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농산물 수입국들이 공조하여 DDA 협상에서도 대폭 개방을 반대하는 논거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8년 9월 22일 "식량 순수입국에 있어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라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NTC와 비슷한 개념으로 OECD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개념
 - 다원적 기능의 계량적 측정
 - 다원적 기능 발휘를 위한 정책대안
- 도출 등 세 가지 범위로 구분하여 보고서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논의중이다.

우리나라의 쌀 협상 관련 조항은 「농업협정문 부속서 5」의 B에 규정되어 있는데, 쌀 협상은 DDA 농업협상과 별개로 UR 농업협정문 부속서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특별대우(쌀 관세화 유예)의 연장여부에 관한 협상은 협정이 발효된 후 10년째 되는 해에 시작되고 완료되어야 한다(「UR 농업협정문 부속서 5」의 B 제8조).

쌀 관세화 유예와 관련된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당초 쌀 관세화 유예시의 조건

- 당해 품목의 수입이 1986~88년 국내소비량의 3% 미만(1조a)
- 1986~88년 이후 동 품목에 대한 수출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1조b)
- 해당 농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생산통제조치가 실시될 것(1조c)
- 개발도상국의 전통적 식생활에 중요한 주식일 것(1조d)

쌀 관세화 유예 연장시의 조건

- 특별대우(관세화 유예) 적용을 계속하기로 합의할 경우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양허 (additional and acceptable concessions)를 제공해야 함(제9조)
- 양허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해당품목에 대한 의무수입량 확대와 의무 수입량 일부에 대한 수입 방식 변경 등일 것으로 예상

관세화 유예가 계속되지 않을 경우의 관세화 방식에 대해서는 제10조에서 언급하였으며, 관세화 이후의 관세 감축방식과 감축률 등은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Modality) 합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관세화 시에는 기준년도의 국내외 가격차로 산정한 관세상당치에 기초한 관세를 산출해야 하고 이행계획서 상에 양허(제10조)

- 기준년도(1986~88)를 대상으로 산출한 관세상당치에 UR 협정 이행기간 동안의 감축율(최소한 개도국 10%, 선진국 15%)을 적용해야 함(shadow reduction)



4) UR 농업협정 관세화 예외조치의 내용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5」는 2개의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section A”는 선진국 특정품목의 관세화 유예, “section B”는 개도국 특정품목의 관세화 유예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Section A)

■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 유예

- '95년도에 '86~'88(기준년도) 평균 국내소비량의 4% 상당 최소 시장접근기회(MMA)를 부여하고, 매년 0.8%씩 증량하여 2000년에 8%까지 확대('95 : 379천톤 / 2000 : 758천톤)
- 이행기간 중 관세화 유예를 중단하고 관세화할 경우 남은 이행기간 동안 기준년도 국내소비량의 0.4%씩 증량
 - 관세율은 기준년도 국내외가격차에 기초하여 산출된 관세상당치를 이행기간 동안 15% 감축한다는 가정하에(shadow reduction) 관세화한 연도의 관세율 적용

■ 2001년 이후 관세화 유예 연장 여부는 2000년 말까지 협상

한국(Section B)

■ 쌀에 대해서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관세화 유예

- '95년에 기준년도 국내소비량의 1% 상당 MMA를 허용하고 2004년에 4%로 증량('95 : 51천톤 / 2004 : 205천톤)

■ 2005년 이후 유예조치의 연장여부는 2004년에 협상

2. DDA 농업협상과 쌀 협상

1) DDA 농업협상의 경과

UR 협상 결과의 토대 위에서 시장개방을 가속화하려는 것이 DDA 협상의 기본 목표이다.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협상의 기본원칙과 일정 등이 구체화되었다.

2002년 3월부터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 등의 세부원칙(Modality) 수립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수출국들은 대폭적인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고 수입국들은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 당초 협상일정

- ① 세부원칙(Modality) 수립('03.3까지)
- ② 이행계획서 제출('03. 9, Cancun 각료회의 까지)
- ③ 협상완료('04말)

DDA 주요 협상 경과

일 시	제목	주요내용
'03.2.12	Modality 1차초안배포 (하빈슨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감축의 경우 UR 방식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으나, 관세조화의 개념을 가미하여 높은 관세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이 감축 국내보조 감축의 경우도 UR 방식인 총액기준 매년 감축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수출국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형식 개도국에 대한 특혜 폭을 넓힘
3.19	Modality 1차초안 수정안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초안과 거의 변화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도국 관세감축방식을 4단계로 구분 등
8.13	미국-EU 절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감축의 경우 모든 품목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수입국에 민감한 품목 그룹에 대해서는 UR방식을 적용하되 저율관세수입량(TRQ)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번째 그룹에는 스위스공식을 적용하고 세 번째 그룹은 무관세화 함 한편 일정 수준 이상의 고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TRQ 확대 등 추가적인 양허협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국내보조의 경우 감축보조(AMS), 최소 허용보조(de minimis) 등 무역왜곡적 보조 총액을 감축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궁극적으로 보조수준이 더 높은 국가가 더 많이 감축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음 수출보조와 수출신용 감축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일부 품목은 철폐하고 나머지는 감축함
8.25	제5차 각료회의 문서초안 (가스띠요) 수정안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EU간 절충안을 기초로 하여 이후 제네바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개도국들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반영
9.13	데르베즈 수정안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띠요 의장안 이후 제시된 각 그룹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SP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 면제 근거 마련 및 관세상한에 신축성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품목별 AMS 상한설정 및 무역왜곡적 보조총액에 대한 감축의무 규제 강화

※「부록7. 도하 각료회의 선언문」 참조

2) 농업협상 세부원칙(Modality) 주요안 내용

하빈슨(Harbinson)초안

농업협상 그룹회의 하빈슨(Harbinson) 의장은 그 동안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2003년 2월과 3월 두 차례 세부원칙 초안을 배포했다. 이 초안은 UR 협상결과에 비해 약 2~3배 감축율이 높으며, 개도국우대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하빈슨 초안 관세 감축 내용

구분	선진국				개도국			
	관세율	감축율		이행기간	관세율	감축율		이행기간
		평균	최소			평균	최소	
초안요지	90%초과	60%	45%	5년	120%초과	40%	30%	10년
	15~90%	50%	35%		60~120%	35%	25%	
	15%이하	40%	25%		20~60%	30%	20%	
					20%이하	25%	15%	
					특별품목(SP) []개	10%	5%	
UR협상 결과		36%	15%	6년		24%	10%	10년

※주 :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개도국의 식량안보나 농촌개발 등을 위해 중요한 일부 품목

국내보조 감축

구분	선진국		개도국	
	감축율	이행기간	감축율	이행기간
초안요지	60%	5년	40%	10년
UR협상 결과	20%	6년	13.3%	10년

감축대상 국내보조를 합한 총액(Total AMS) 기준으로 감축 하며, 품목별로 1999~2001년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까스티요(Castillo)안

시장접근

- 관세감축 : 세 개 그룹으로 나눈 혼합 방식 적용
 - (i) 총 품목의 []% : 평균 []%, 최소 []% 감축
 - 동 그룹은 관세감축과 TRQ의 조합을 통해 시장접근 확대
 - (ii) 총 품목의 []% : []를 계수(coefficient)로 한 스위스 공식 적용
 - (iii) 총 품목의 []% : 무관세 적용
- 관세율이 최고 []%를 넘는 품목은 동 최고 수준까지 감축하거나, request/offer 방식을 통해 TRQ 증량 등 추가적인 시장접근 확대 보장
- 가공단계에 따른 관세 상승 문제(tariff escalation) 해결
-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G) : 미합의
- 개도국우대 조치
 - (i) 총 품목의 []% : 평균 []%, 최소 []% 감축
 - 동 그룹은 관세감축과 TRQ의 조합을 통해 시장접근 확대
 - 단, 특별품목(SP)은 최소 []% 감축, TRQ 증량 면제
 - * 특별품목 결정 기준 : 추후 논의
 - (ii) 총 품목의 []% : 평균 []%, 최소 []% 감축
 - (iii) 총 품목의 []% : 평균 []%, 최소 []% 감축
 - * 또는 (ii), (iii)를 대신하여 총 품목의 []%에 대해 []를 계수로 한 스위스 공식 적용 가능
 - 관세상한 설정문제는 추후 협의
 - 낮은 감축율 및 긴 이행기간 적용
 -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M) 마련 : 기준, 대상 농산물 추후 논의
 - 선진국들은 개도국산 농산물의 []%에 대해 무관세 수입 허용

국내보조

- 무역왜곡적 보조수준이 더 높은 국가가 더 많이 감축하도록 함

AMS : UR 이행 최종년도 기준 []% ~ []% 감축,

Blue Box : []년까지 '00~'02 농업총생산액의 5% 이하로 지급 가능,

이후 []년에 걸쳐 매년 []% 감축,

de-minimis 수준 : []% 감축

- Blue Box가 '00~'02 농업총생산액의 5% 이하로 지급 가능한 기간 동안에도 AMS, Blue Box, 최소허용보조(de-minimis)를 합한 총액이 2000년도 총액보다 훨씬 작도록 감축해 나가야 함

※ 현행 농업협정상의 Blue Box(제6.5조) 요건 중 생산제한은 언급 없음

- 허용보조 기준 : 미합의

- 개도국우대 조치(S&D) 도입

- 낮은 감축율 및 긴 이행기간 적용, de-minimis 감축의무 면제, 개도국우대 국내보조(농업협정 6.2조) 및 허용보조 적용

수출경쟁

-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 식량원조 모두에 대해 수출보조에 상응하는 감축의무 적용

- 수출보조

- 개도국 관심 품목에 대한 수출보조 : []년에 걸쳐 철폐

- 기타 품목 : 철폐를 전제로 감축

- 수출신용

- 개도국 관심 품목에 대한 무역왜곡적 수출신용 : []년에 걸쳐 철폐

- 기타 품목에 대한 무역왜곡적 수출신용 : 철폐를 전제로 감축

※ 무역왜곡적 수출신용 판단 근거 : 상환기간([]개월)

- 식량원조 : 상업적 거래를 저해해서는 안됨
- 수출국영무역 : 수출국영무역에 의해 제공되는 수출보조에 대해 수출보조에 상응하는 감축의무 적용
- 수출제한 및 금지 : 현행 농업협정 제12조 강화방안 추가 논의
- 개도국우대 조치 도입
 -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철폐를 전제로 긴 이행기간 적용
 - 개도국우대 수출보조(농업협정 9.4조) 유지
 - 최빈개도국(LDC : Least-Developed Country) 및 식량 순수입 개도국(NFIDC :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에 대해 신축적 수출신용 규율 적용

기타

- 미합의 관심 쟁점
 - 총액감축 vs. 품목별 감축방식 문제, 저율관세 쿼타(TRQ) 증량 기준, in-quota 관세, 수출독점국영무역, 수출세, 비교역적 기능(NTC), 이행기간, 분야별 자유화, 시장접근 · 국내보조 · 수출경쟁의 연계성, 평화조항, 지리적표시

데르베즈(Derbez)안

시장접근 분야(관세감축 및 TRQ)

- 모든 농산물을 3개 그룹으로 분류,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감축(분류 방식과 비율은 추후 협상)
 - i) 그룹 : 수입에 민감한 품목을 대상으로 UR방식을 적용하되, 고관세 유지시는 TRQ 확대
 - ii) 그룹 : 스위스공식(고관세는 저관세 보다 많이 감축)
 - iii) 그룹 : 무관세
- 고관세 품목에 대하여는 일정 수준의 관세상한을 설정하여 감축하거나 미감축시, R/O(Request & offer System : 시장개방요청 및 제안방식)방식으로 TRQ 증량
 - 다만, 소수 NTC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상한 예외 가능(협상대상)
-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과 동일하게 3그룹으로 분류하여 감축하되,
 - iii) 그룹의 관세는 5%이하로 감축
 - i) 그룹 중 특별품목(SP)을 설정하여 저율관세 쿼타(TRQ)증량 면제관세상한 문제는 추후 협상과제임

국내보조

- 무역왜곡적 보조수준이 더 높은 국가가 더 많이 감축하도록 함
- 감축대상 보조(AMS)
 - 최종양허수준을 기준으로 []% ~ []% 감축
 - []년 동안의 품목별 평균 AMS 수준을 상한으로 도입
- 생산제한직접지불(Blue Box)
 - []년까지 '00~'02 농업총생산액의 5% 이하로 지급 가능, 이후 []년에 걸쳐 매년 []% 선형감축
 - ※ 현행 협정 상의 요건 중 생산제한 요건 언급 없음(변형된 Blue Box)

- 최소허용보조(de-minimis) : []% 감축
- 무역왜곡적 보조 총액상한 설정
 - 2000년도 AMS 양허수준, 변형된 Blue Box, de-minimis의 총액을 []% 감축
- 허용보조(Green Box)
 - 허용보조 기준을 생산 또는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최소화 되도록 재검토
- 감축폭 및 이행기간을 추후 협상에서 결정
- 개도국의 경우
 - 품목별 최소허용보조는 현행 10% 유지
 - 농촌개발 등에 필요한 투입재 및 구조조정 보조(개도국우대 국내보조)와 개도국우대 허용보조 강화

수출보조

-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 식량원조 모두에 대해 수출보조에 상응하는 감축의무 적용
- 수출보조
 - 개도국 관심 품목에 대한 수출보조 : []년에 걸쳐 철폐
 - 기타 품목 : 철폐를 전제로 감축
 - ※ 개도국 관심품목 리스트를 양허서 제출 전에 작성토록 명시
- 개도국의 경우
 - 개도국우대 수출보조(농업협정 9.4조) 현행 유지

기타

- 평화조항 : [] 개월 연장
- 미합의 쟁점 : TRQ 증량 기준, 수출독점국영무역, 수출세, NTC, 분야별 자유화, 시장접근 · 국내보조 · 수출경쟁의 연계성, 지리적표시 등

농업협상 세부항목(Modality) 주요안별 비교

구분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특징(비고)
UR협상결과 (현재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36% - 품목별 최소 15% • TR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량의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기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출 36% - 물량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은 선진국의 2/3 수준 감축
하빈슨 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방식을 기준으로 하되 관세수준별로 감축률 차 등 적용 • TR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소비량을 기준으로 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기준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극적으로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은 선진국의 2/3 수준 감축
미국-EU안 (수치는 포함 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구간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방식/스위스방식/무세화 • 관세상한 설정 • SP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S, de minimis 감축, Blue Box에 대한 상한 설정 • 무역왜곡적 보조 총액에 대한 제한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관심 품목에 대한 수출보조 : []년에 걸쳐 철폐 • 기타 품목 : 감축 • 수출보조와 수출신용에 대해 동일한 rule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우대 구체적으로 미 반영
까스띠요안 (수치는 포함 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구간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방식/스위스방식/무세화 • 관세상한 설정 • SP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S, de minimis 감축 • Blue Box에 대한 상한 설정 후 감축 • 무역왜곡적 보조 총액에 대한 제한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관심 품목 : []년에 걸쳐 철폐 • 기타 품목 : 철폐를 전제로 감축 • 수출보조와 수출신용에 대해 동일한 rule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EU안에 비해서는 개도국우대를 구체적으로 반영
데르베즈안 (수치는 포함 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상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소수 NTC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상한 예외 가능 (협상대상) • SP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S, de minimis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보조상한 설정 • Blue Box에 대한 상한 설정 후 감축 • 무역왜곡적 보조 총액 감축, 이행초기 일정 수준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관심 품목 : []년에 걸쳐 철폐 • 기타 품목 : 철폐를 전제로 감축 • 수출보조와 수출신용에 대해 동일한 rule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상한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까스띠요안에 비해 수입국 의무 강화

3) DDA 농업협상과 2004 쌀 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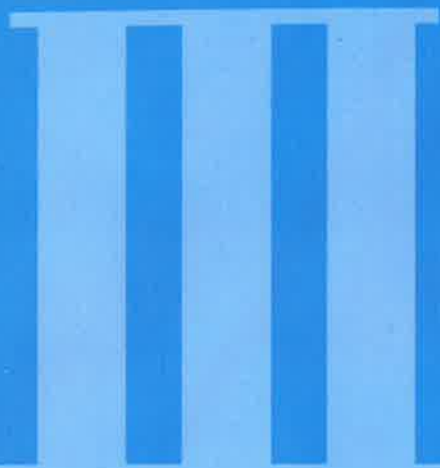
법적으로 쌀 협상과 DDA 농업협상은 아무 관계가 없다. 쌀 협상은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5」에 근거해 우리나라 쌀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와 개별적으로 벌이는 협상이기 때문이다.

반면 DDA 농업협상은 전 세계적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지난 1993년에 타결된 UR 농업협상과 성격이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두 가지 협상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쌀 협상의 결과가 DDA의 규범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만약 우리나라의 쌀 시장이 관세화 된다면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를 계산해서 WTO에 제출하게 된다. 이렇게 제출된 관세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1995년부터 관세화 한 쌀 이외 다른 품목의 관세와 마찬가지로 낮추어가야 한다.

이처럼 관세를 낮추는 방식은 DDA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쌀이 관세화된다 하더라도 DDA 협상에서 결정될 관세 감축방식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DDA 협상 일정은 지연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관세인하에 관해 참고할 만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쌀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4 쌀 협상 추진 절차 및 예상쟁점

1. 2004 쌀 협상 추진 절차

1) 2004 쌀 협상의 성격과 여건

쌀 협상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이며 유예와 관련된 조건을 협의하는 협상이다.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국의 합의를 얻기 위한 추가적인 양보(additional and acceptable concessions)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관세화 할 경우, 기준년도('86~'88) 관세상당치(TE)를 '95년부터 적용한 것으로 가정하고, UR 협상의 최소관세감축률(10년간 10%)을 가상 적용(shadow reduction)한다. 또, 2005년부터는 관세상당치(TE)의 90%로 관세화하고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협상에서 결정되는 바에 따라 향후 관세 감축이 적용된다.

쌀 협상 시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모두 장·단점이 있다.

우선 관세화 유예 시에는 합의된 의무 수입량만 수입되므로 연도별 쌀 수입량의 예측이 용이한 반면, 유예 대가로 MMA 증량을 포함한 상대국의 과도한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관세화시에는 과도한 MMA 증량은 피할 수 있으나 국제 가격 및 환율 변동, 향후 관세 감축 등에 따른 수입량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쌀 협상은 관심국가들과의 양자협상이 핵심이다.

미국, 중국, 호주 등 예상되는 상대국들과 개별적인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여 각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 국가들과의 협상결과를 종합하여 공동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DDA 협상일정 지연으로 2004년 세부원칙(Modality)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쌀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4년 2월 WTO 협상의장단이 구성되는 등 협상 재개 움직임은 있으나 당초 협상시한인 금년 말까지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미국 대선(2004.11), EU 회원국 확대(2004.5), EU 새로운 집행위 출범(2004.11)

2) 2004 쌀 협상 추진절차

쌀 협상의 일반적인 절차를 보면 먼저 우리나라가 쌀 협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WTO에 통보하면 WTO는 전 회원국에 이를 알린다. 관심국가는 우리나라의 통보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협상참여요청을 WTO사무국과 우리나라에 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협상참여를 신청한 국가들과 양자협상을 하게되고, 우리나라가 관심 국가와 양자협의를 끝내면 협상결과를 WTO에 통보하고 90일 이내에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합의안이 공식 확정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2004년 말까지 협상을 끝내고 WTO에 의한 공식 확정을 마치려면 실제 협상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해당사국이 확정되는 기간과 WTO에서 협상결과가 공식 확정되는 기간에는 사실상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충분한 협상 시간을 확보하여 시한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조기에 협상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쌀 협상 절차 전개도



■ 잠깐

만약 우리나라가 2005년 부터 관세화로 전환하자고 할 경우에는 WTO의 일반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해 당사국과 협상을 거쳐 관세화 유예 종료시점 3개월 전인 2004년 9월 말까지 관세화와 관련된 제반 기술적인 사항(예를 들면 쌀의 관세상당치 계산방법 및 근거)을 WTO에 통보하고 이해 당사국과 3개월간의 검증절차를 거치면 그것으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다. 물론 검증과정에서 쌀의 관세상당치에 대한 계산방식과 근거, 그리고 결과 등 기술적인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일 수는 있다.

우리나라가 쌀 협상을 추진한다는 것은 쌀의 관세화 유예를 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이해 당사국과 그 조건을 타협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우리나라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한 수준이라면 우리나라는 협상 목표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

2. 2004 쌀 협상시 예상 쟁점

1) 관세화유예 연장

단점 : 유예기간 끝나도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계속 수입해야

유예가 종료된 이후에도 유예를 위해 설정된 MMA는 계속 수입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도 MMA 쿼터물량은 계속 수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관세화유예 연장기간에도 쌀의 관세를 계속해서 감축해야 할 가능성도 높다. UR 협상에서도 유예기간 중에 비록 관세가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관세가 설정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관세는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shadow reduction).

장점 : 국영무역 이용 정부가 시장 조절 가능

국영무역을 이용하여 정부가 MMA 물량을 조절하고 감독할 수 있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장점은 향후 MMA 관리에 대한 엄격한 WTO의 규제 마련으로 부분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DDA 농업협상에서는 현재와 같이 MMA 쌀의 수입에 최종 용도를 규정하는 인위적 관리를 제한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외국사례

대만은 2002년 1년에 한 해 쌀의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국내소비량의 8%를 MMA로 설정했고 그 관리에 있어서는 MMA의 65%만을 정부가 수입하고 나머지 35%는 민간이 선착순으로 수입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민간수입의 경우 반드시 해당연도 MMA가 전량 수입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재배정을 하고 있다.

예상쟁점 1) 유예기간은 언제까지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이 확정되었다면 유예연장 기간은 개도국 또는 선진국의 이행기간과 자연스럽게 일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세부원칙(Modality) 없이 쌀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05년부터 향후 몇 년간이나 쌀의 관세화 유예연장을 제시하고 타협할 것인가가 주요한 쟁점이 된다.

시장 개방 협상 대안별 장단점

	장점	단점
관세화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수입량만 수입 (수입량 예측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혜에 대한 지불 불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국이 수락가능한 수준의 의무 수입량을 매년 증량 • 보이지 않는 관세감축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관세화 시 누적감축 효과가 일시에 나타남
관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국의 무리한 의무수입량 증량요구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가격, 환율 등에 따라 국내 수입 가격이 달라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수입량이 줄거나 늘어날 수도 있음 • 향후 DDA 협상 결과에 따라 매년 관세 감축

※주 : 이러한 장·단점은 DDA 농업협상 결과, 환율, 국제 쌀 가격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짐

예상쟁점 2) MMA 증량수준 얼마나 될까

MMA 증량수준은 농업협정문 조문대로 '추가적이고 수용 가능한 양허수준'이 얼마가 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일단 '추가적'이란 용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004년 MMA 수준인 4%보다 양허수준이 커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수용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이해당사국간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세부원칙(Modality)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국들은 자국의 쌀 수출능력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MMA 증량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MMA 증량수준은 DDA 농업협상에서 결정될 시장개방의 수준(관세감축과 TRQ 증량폭)에다 유예연장에 따른 보상부분을 추가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MMA 방식에 의한 수입물량

단위: 천톤, %

연 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물 량	51.3	64.1	77.0	89.8	102.6	102.6	128.3	153.9	179.6	205.3
MMA/소비량	1.0	1.25	1.5	1.75	2.0	2.0	2.5	3.0	3.5	4.0

▶ TRQ란?

Tariff Rate Quota의 약자로 관세할당제도를 뜻한다.

특정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수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동시에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중관세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UR 협상결과 보리, 돼지고기 등 67개 품목군에 대해 관세할당물량과 저율관세를 국별양허표(C/S: Country Schedule)에 명기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TRQ제도는 수입쿼터와 같은 비관세 장벽에 의한 무역제한 조치에 비해 무역흐름을 덜 왜곡하기 때문에 기존의 수량제한조치에 비해 보다 시장지향적인 무역질서라는 측면에서 선호된다.

2) 관세화

단점 : 국제가 변동따라 국내시장 불안정

쌀을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국제 쌀 시장의 가격변동이 여과없이 국내로 전달되어 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식으로 하는 자포니카 계열의 쌀은 생산량에 비해 교역량이 적어 국제 쌀 수급의 조그만 변동에도 국제가격이 불안정하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대로 국제가격이 상승하면 관세로 인한 국경보호효과가 커져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자포니카 쌀의 주요 소비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이기 때문에 쌀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국제교역량이 늘고 세계시장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관세화에 의한 국경보호효과는 예상외로 커질 수도 있다. 반대로 국제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관세로 인한 국경보호효과가 낮아져 관세화가 불리하게 된다.

관세화로 전환한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에는 특별 세이프가드라는 방어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장점 : DDA타결까지 시간 벌 수 있어

관세화는 DDA 농업협상의 규범안에서 진행되므로 우선적으로 DDA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즉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쌀의 관세를 감축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MMA 물량을 늘릴 의무도 동결될 수 있다.

최근 협상의 추이로 볼 때 향후 2~3년간 DDA 타결이 늦춰진다면 적어도 2006년이나 2007년까지는 2004년의 쌀 시장개방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예상쟁점) 관세(상당치)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국내외 가격차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관건

계산지침은 1986~1988년 3개년 평균 쌀의 국내외 가격차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쌀의 관세가 외국산 쌀로부터 우리나라의 쌀 시장을 보호하는데 핵심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관세를 크게 하려고 할 것이고 수출국들은 이를 낮추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실질적인 국내외 가격차를 반영한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여 국내외 가격을 어떻게 찾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결국 관세(상당치)는 사용되는 국내가격, 국제가격, 품질조정을 거쳐 계산된 다음 경우에 따라서 다시 적절한 조정까지 가능하고 이 결과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관세 계산방법

1986~1988년 당시 쌀의 국내시장에서 지배적인 대표 도매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쌀의 도매가격의 경우 당시 상황에서 어떤 가격을 대표적인 도매가격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는 문제이다. 국제가격의 경우도 실제 우리나라에 수입된 가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인접국의 수입가격 또는 주요 수출국의 수출가격에다 보험료, 운송료 등 수입국 도착까지의 제반비용을 더하여 추산하도록 되어 있다.

IV

2004 쌀 협상
대응방향

1. 정부의 대응방향

정부에서는 국내 쌀 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쌀 협상의 주요내용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량 증량 수준 및 유예기간이 될 것이나 대만의 협상 사례에서 보듯이 의무수입량 수입방법, 의무수입량 용도제한 문제 등도 유예조건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대국의 요구조건이 과도하여 관세화 할 때보다 쌀 산업에 더 불리한 경우에는 실리 확보방향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그리고 협상 대안 간 신축성 유지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협상대안 비교 및 국내영향 분석 등을 토대로 최종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협상력 극대화와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쌀 협상은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국내 공감대 형성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협상의 성격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사실인식의 확산과 '참여와 대화'로 협상대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출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농민단체, 언론계, 학계, 국회 등 여론 형성 그룹별로 여론을 수렴하고 이들에게 정확한 자료와 내용을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다.

2. 쌀 산업 종합대책

1) 쌀 산업 종합대책의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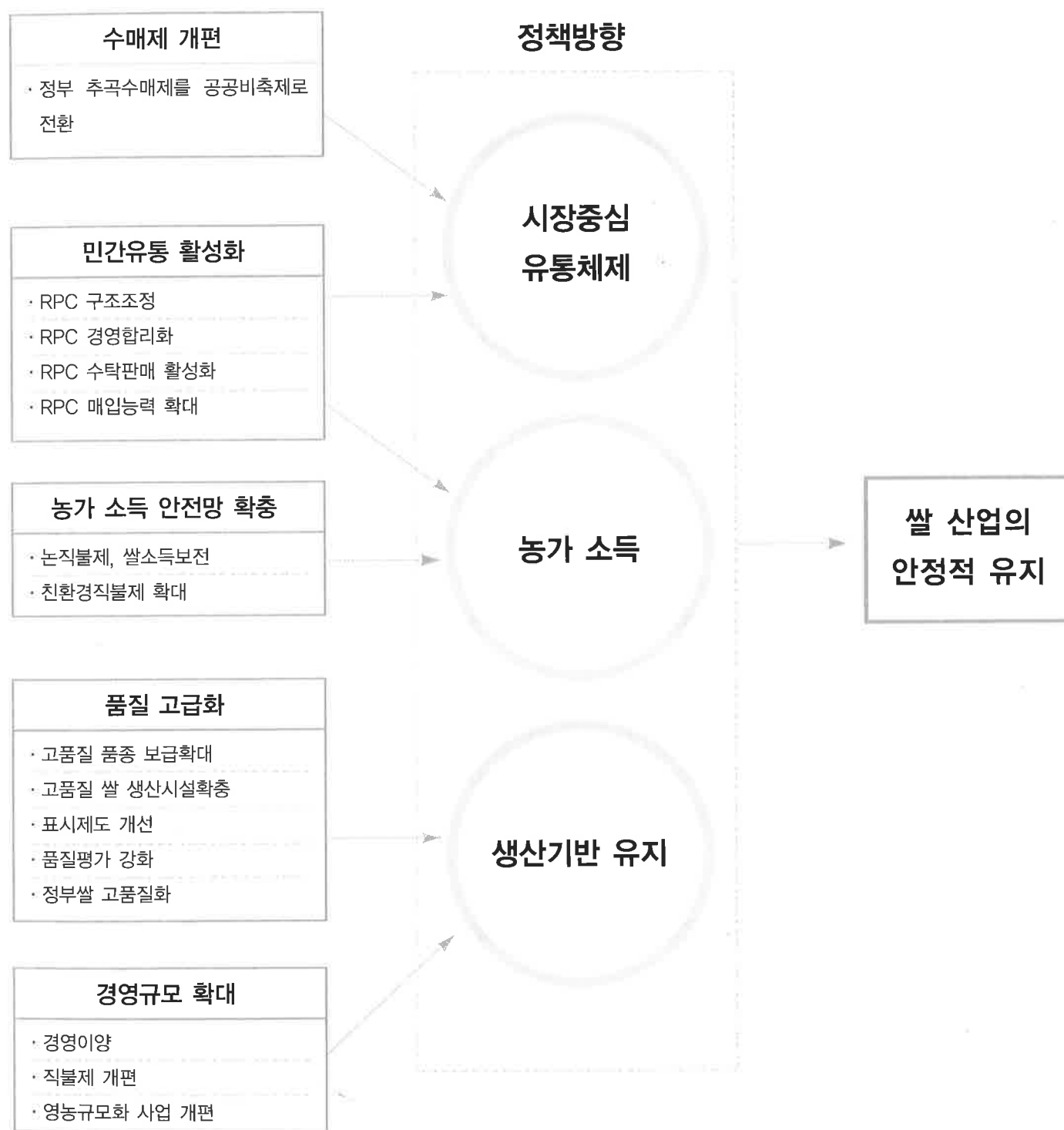
쌀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로 수입쌀과의 경쟁심화, 가격하락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WTO/DDA 협상에 따른 보조금 추가 감축으로 가격지지 중심의 쌀 정책 방향은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쌀 산업의 안정을 위해 생산·유통·소비가 시장원리에 따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의 쌀 정책은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는데 집중 지원된다.

쌀 산업 종합대책의 핵심 추진전략은 「시장원리 강화 및 정부와 민간의 역할·기능 재정립」이다. 시장원리의 강화를 위해 소규모 영세농 중심의 쌀 생산구조는 개방폭이 확대된 이후에도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모화된 전업농 중심체제로 전환된다. 그리고, 국회동의제·이중가격제 등 시장기능을 저해해 왔던 수매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수급조절기능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은 오히려 강화된다.

쌀 소비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도 추진된다. 소비자의 고품질 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품질고급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한편으로는 시장을 감시하는 기능이 확대 추진된다. 그리고, 시장개방폭 확대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안전망도 확충된다.

쌀 산업 종합대책의 목표와 추진 전략



2) 쌀 산업 종합대책의 추진방안

정부수매제도를 공공비축제로 전환

| 추진배경 | 변화되는 여건에 적합한 양정시스템 구축 필요

WTO 출범 이후 보조금감축으로 수매물량이 줄어들어 따라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수매제도의 소득지지효과와 수급조절기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우선 수급조절 면에 있어서 WTO/DDA 협상에 따른 보조금 추가 감축과 소득보전 직불제의 도입으로 수매량이 더욱 줄어들게 되는 경우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량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시장가격의 참조가격 역할을 하는 수매가가 시장가보다 높아져서 수급상황을 반영한 가격형성을 저해함으로써 시장왜곡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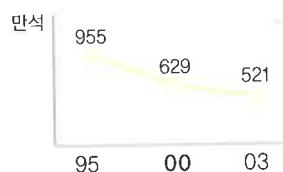
따라서 기존의 정부 수매제도는 변화되는 여건에 적합한 양정시스템으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에 2004년에는 현재 추곡수매제 개편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과 제도정비'를 할 예정이며, 2005년까지 '공공비축제의 도입 및 정부쌀 관리방식 전면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추진방안 | 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

현행 추곡수매제를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며, 전환시기는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2005년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공공비축제 도입의 기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수매물량 변화

• 수매물량 :



• 직접소득효과 :



▶ 수매가 & 시장가

	(단위:천원/80kg)		
	1995	2000	2003
수매가	133	161	168
시장가	125	159	163

공공비축제 도입의 기본 개요

비축목표	- 흉작에 대비한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해 600만석 내외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비축물량 매입	- 비축물량은 수확기 매입물량 등으로 충당 - 지역별 인구, 벼 재배면적을 기초로 지역별 매입·비축량을 결정 - 수확기 지역별 산지가격으로 매입
비축물량 보관	- 정부비축용 창고 신축·창고관리 체계화 추진 - 민간의 우수한 창고와 도급계약을 체결
비축물량 방출	- 회전관리를 위해서 매년 일정물량을 방출 - 비축물량은 공매 등을 통해 유통업체에 판매 - 연간 방출계획을 사전 고시하여 예측가능성 확보 - 정부쌀 직접 공급은 군수용 등으로 최소화

제도적으로는 정부수매중심의 양곡관리법을 공공비축과 민간유통기능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한다(2004년). 이를 위해 국회동의제 폐지, 공공비축 목표 및 운영방안, 민간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일정수준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공공비축제 도입을 위해 2005년까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재고량을 적정재고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재고감축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기 위해 생산조정·논에 타작물 재배 등 추진
 - 2003~05년 기간중 매년 27,500ha 수준의 생산조정제, 3,000ha 수준의 논콩 재배사업 실시
 - ※생산조정제의 지속 및 확대여부는 수급상황, 2004 쌀 협상 및 DDA협상결과 등을 감안하여 2005년 재검토
 - 대체작물 지원(종자대 등)을 통해 최대한 밭벼 재배 억제
 - 하천부지 등 국·공유지 및 특수 이모작지에 타작물 재배유도
- 필요한 경우 주정용 등으로 재고 특별처리 추진
 - 수입산 타피오카를 대체하여 주정용 공급 추진
 - 여건이 될 경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지원 추진 등
- 쌀소비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쌀소비촉진대책 지속 추진
 - 젊은 층, 주부 등을 겨냥한 "Love 米" TV 공익광고 등 전개
 - 쌀 가공기술·가공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확대

쌀농가 경영규모화와 생산비 절감

| 추진배경 | 쌀값 하락에 따른 경영규모화 필요

WTO/DDA 및 쌀 협상으로 쌀시장의 개방폭이 확대되면 쌀값이 하락하고, 영세한 우리 쌀농가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규모별 농가 현황

- 0.5ha 미만 농가가 428천호(43.5%)로서 전체 생산의 13%수준 담당
- 2ha 이상 농가는 86천호(8.7%)로서 전체 생산의 32% 수준 담당

앞으로 수입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개방 시 2013년 국내 쌀값은 80kg 가마당 10~12만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80kg 가마당 생산비가 10만원 이상인 농가가 전체의 35% 수준을 차지해 경영규모에 따라 생산비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개방 시 영세농가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쌀값 하락으로 단위면적당 소득률이 감소하더라도 적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 10a당 생산비

- 0.5ha 미만 농가 : 572천원/10a
- 5ha 이상 농가 : 494천원/10a

이에 정부에서는 '6ha 수준의 전업농 7만호 육성'을 목표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경영의 규모화를 추진하여 6ha 수준의 전업농이 전체생산의 절반 수준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는 지역 특성에 따라 친환경농업쌀 등 특색미 생산을 하여 틈새시장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 10a당 소득

- 2001~02평균 726천원
- 2013년 선진국 개방 시 531천원

| 추진방안 | 경영이양직불제 및 영농규모화사업 개편

쌀농가 경영규모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정부에서는 두 가지 면에서 접근을 시도한다. 우선 고령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경영이양직불제를 개선하고, 규모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농규모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다.

■ 경영이양직불제 개선

경영이양직불제 개선의 핵심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경영이양 된 농지는 2ha 이상의 55세 미만 농업인에게 집중 지원된다. (사업물량(2004~2010년) : 83천ha)

경영이양직불제 개선 방안

대상농가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63-69세의 고령 농농가
대상농지	대상농가가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안의 논
지급조건	탈농을 조건으로 소유농지(2ha 이내)를 농업기반공사·전업농에게 전부 매도하거나 농업기반공사에 5년 이상 장기 임대 - 취미 또는 자가소비 목적의 영농은 허용(0.1ha까지)
지급기간	경영이양일로부터 70세까지 최장 8년간 지급
지급단가	- 농업기반공사에 매도하는 농지대금은 10년 동안 분할 지급을 원칙 · 농지매매대금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는 가산 지급 · 농지매매대금은 분할지급외에 50% 선급형 등 다양한 지급방식 도입 ※ 매도시 월 수령액(50% 선급형) : 711천원/ha[토지대금(384천원/ha)+직불금(241천원/ha) + 매매대금이자(86천원/ha)] - 장기 임대 시에는 2,977천원/ha를 일시불로 지급

■ 영농규모화사업 개편

쌀농가 경영 규모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농규모화 사업이 개편되는데, 「6ha 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벼 재배면적의 50%이상(450천ha)을 전업농이 담당하게 될 것이며, 쌀전업농 육성목표 달성을 위해 총 164천ha의 규모화가 추진된다.

※경영이양직불제, 영농규모화, 농지은행 등을 통해 60% 지원, 40%는 자력 확대 유도

그리고,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지원자금이 확충되고, 지원조건 또한 개선되는데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농규모화 사업 재원 확충을 위해 농지관리기금(관리계정)에 정부출연금 확대
- 쌀 전업농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매매자금의 이자율을 인하하고, 임차료는 현재 고정 방식에서 매년 쌀값 등과 연동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 영농규모화 자금은 2~5ha 농가 중 희망자에 우선 지원
- 지원효과의 장기화를 위해 매매자금의 지원 상한연령 하향조정 (현행 : 60세 → 개선 : 55세)

※ 2005년부터 매년 1세씩 인하, '09년부터 50세 기준 적용

■ 농지은행제도 도입

농지수급 조절 및 농지유통화 지원을 위해 2005년까지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생산비를 22%(불변가격기준) 절감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경영규모 확대, 비료·농약 사용 감축, 생력재배기술 확대 보급, 기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지은행제도 실시에 따른 쌀 생산비 절감 계획

구 분	2002	2007		2010	
		목표	증감(%)	목표	증감(%)
10a당 생산비	529,609	456,498	△13.8	412,858	△22.0
직접생산비	264,254	227,239	△14.0	205,256	△22.3
간접생산비	265,355	229,259	△13.6	207,602	△21.8
kg당 생산비	1,124	913	△18.8	826	△26.6
직접생산비	561	454	△19.0	411	△26.8
수 량(kg/10a)	471	500	6.2	500	6.2

▶ 농지은행제도란?

농지매매정보를 수집하여 전업농에 알선하거나 농지신탁 기능을 통해 농지의 매매·임대차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쌀 생산비 항목별 절감계획

종묘비	농가파종량 감축 유도를 통해 16.2% 절감 * 농가파종량 : (2002) 6.6 → (2007) 5.9 → (2010) 5.5kg/10a
비료비	농가시비량을 표준시비량 및 친환경농업 시비량으로 단계적으로 30% 절감 추진
농약비	병해충 생력방제기술, 제초체계 개선, IPM 사업확대 등에 의해 방제횟수 감축 및 농약 사용량 절감을 통해 17% 절감
노력비	직파재배면적 확대, 산물수확확대, 무경운·최소경운을 통해 24.6% 절감
토지용역비	시장개방 폭 확대에 따른 쌀값하락 시 토지용역비도 상당 수준 하락 전망

쌀농가 소득안정

| 추진배경 |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 감소 예상

쌀은 농가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품목으로서 농가소득의 21.6%, 농업소득의 46.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개방 폭 확대와 보조금 감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쌀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득안정 장치의 확충이 필요하다.

쌀 소득이 농업소득 및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1995	1998	2002
농 가 소 득(A)	21,803 천원	20,494	24,475
농 업 소 득(B)	10,469	8,955	11,274
쌀 소 득(C)	3,984	4,826	5,289
비 중(C/A, C/B)	18%, 38%	24%, 54%	22%, 47%

2002년 686만원/ha 수준인 쌀소득은 선진국으로 개방할 경우 2013년 531만원/ha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WTO 보조금 감축으로 쌀소득보전 직불금도 AMS제약을 받을 전망이며, 논농업직불제는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증산을 유인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쌀 전업농가 소득을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농가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안전망을 보완·확충할 예정이다.

| 추진방안 | 농가여건에 맞는 소득안정장치 보완 · 확충

■ 논농업직불제 개편

논농업직불제는 소득변화에 신속 ·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생산 · 가격과 연계되지 않는 생산중립적 성격의 직불제(decoupled income support)로 개편된다. 개편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담수의무 등 생산과 연계될 수 있는 지급요건은 폐지하고, 농지보전의무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농지로서의 기능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지급총액은 시장개방 폭 확대, 쌀농가 소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지급단가는 지급총액범위내서 대상면적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셋째, 지급대상은 농지의 소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실경작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친환경직불제 개편

친환경직불제는 친환경유기농업은 물론 저투입농법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확충한다.

기존에 논과 밭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친환경 직불제를 통합하고, 친환경 인증농가 중심에서 저투입 농가로 확대하게 되며,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직불제 지원대상 정책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로 개편된다.

단기적으로 2004년도에는 연속가입자에 대해 농업인 납부금 부담 완화를 검토할 것이며, 시장개방 폭 확대 이후에는 가격차 보전방식에서 생산중립직불제 등과 연계하여 소득감소액의 일정수준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농가의 여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보전수준과 납부금 수준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고품질 쌀 생산 · 유통체제 정착

| 추진배경 | 우리쌀의 품질관리와 소비자 신뢰 확보 필요

현재 우리쌀의 외관상 품위는 외국의 고급쌀에 비해 다소 떨어지며, 싸래기 · 분상 질립의 함유비율이 높은 편이다. 관능적인 맛에 있어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품종 정착 · 품질 관리 등이 미흡하여 외국의 고급쌀에 비해 우수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쌀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고급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품질고급화를 통한 수입쌀과의 차별화 및 신뢰확보를 목표로 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다. 고품질 쌀 생산 · 유통체제 정착을 위한 정부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 지역별 대표 품종을 육성하고, 완전미 유통비중을 확대
- 시중유통 쌀의 점검 ·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 정부수매비 · 정부쌀의 품질을 시중유통쌀 수준으로 고급화

▶ 우리 쌀의 품질고급화를 저해하는 요소들

- 고품질벼 종자의 개발 · 보급이 미흡하고, 매년 정부추천품종의 변화가 커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품종 정착 미흡
- 재배관리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논의 지력이 떨어져 화학비료 과다 사용
- 현대화된 건조 · 저장시설 부족으로 수확후 관리가 부실
- 소비단계에 고가 · 양질미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서 RPC 등의 품질관리가 미흡하고,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저하를 초래
- 5~6월 이후 RPC 등의 원료곡으로 사용되는 정부 수매물량의 품질이 떨어져 브랜드의 품질일관성 유지에 애로



| 추진방안 | 쌀의 고품질 생산·유통체제 구축

정부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제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 품종별 수매·보관·방출

2004년부터 정부수매물량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정부수매물량의 품종별 수매·보관·방출을 추진한다. 2004년산 정부수매는 시·군별로 3개 내외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품종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사정에 따라 도를 몇 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광역단위 품종통일을 유도할 예정이다.

- 품종선정 : 시·군별로 시·군, 기술센터, 농관원, RPC 등 민간유통업체,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선정
- 품종예시 : 시군별 정부수매품종과 함께 추가제한 희망 RPC의 수매품종을 사전에 예시 (품종제한시 정부 보급종 공급량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급종 공급능력을 확대 하면서 농가간 자율교환을 유도하고, 수매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원의 품종식별 능력을 배양하고 품종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

또한 2004년산부터는 정부수매물량을 품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공매도 품종별·등급별로 실시한다. 시·군별로 3개 품종 이내로 수매할 경우 현행 구분보관 방법과 동일하여 보관능력이 감소하지 않으나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위해 창고별로 단일 품종을 등급별로 보관할 예정이다.

그리고, 5월 이후 RPC 등의 원료곡으로 사용되는 정부 수매물량 공매도 품종별로 실시하여 품종별 유통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학교급식용·군관수용 등 밥쌀용도 수요처 1회 주문량을 가급적 단일 품종으로 공급하고, 재고부족 등으로 1회 주문량을 단일 품종으로 공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포대별로 구분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 정부쌀 검사규격 강화

품질고급화를 위해 정부쌀 검사규격을 강화하고 체계화한다.

우선, 현재 단일등급인 검사등급을 밥쌀용·가공용 등 용도별로 다양화하고, 학교 급식 등 밥쌀용 검사규격은 시중 유통쌀 수준으로 강화한다. 그리고, 일반계·통일계·수입쌀로 분리되어 있는 규격을 하나로 통합하고, 싸래기, 분상질립 등 검사항목 용어에 대한 정의도 시중 쌀 유통규격 및 국제적(미국, 일본 등) 추세에 맞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종자 육성 및 보급 확대 추진

지역대표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RPC, 농업기술원, 지역대학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품종을 개발할 예정이다. 즉, 품종개발의 기본방향을 품질고급화에 두고 생육온도, 병충해발생 등의 지역적 특성이나 친환경미, 가공용 특수미 등 재배목적에 적합한 고품질품종의 개발을 강화한다.

또, 생력 직파재배 적응품종 등 생산비 절감형 고품질 품종을 개발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고영양성분, 건강기능성 품종 등 다양한 기능성의 특수미를 개발할 계획이다. 그리고, 고품질 품종을 중심으로 정부 보급종 공급량을 확대하여 2007년까지 50%수준으로 확대하여 2년 1기의 갱신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2006년 이후 정부 보급종 전량을 고품질품종으로 공급
- 신규 개발되어 등록된 고품질품종은 시험장으로부터 원종 종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농가에 조기공급
- 현재 16,000톤인 종자관리소 정선시설 현대화로 공급능력 확대
- 고품질품종 재배확대 유도를 위해 RPC 계열화사업 확대계획과 연계, 정부보급종을 RPC 위주로 우선공급

■ 들녘별 재배품종 단순화 및 지역별 대표품종 육성

들녘별 재배품종을 단순화하고 각 지역별로 대표품종 중심으로 생산·유통 단계별·표준 관리기술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동일지역에서도 토질, 지력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로 개발하고, 밥맛과 수량을 동시에 고려한 지대별 적정 질소 시비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파종·이앙시기, 재식거리·주당본수, 물관리, 수확시기 등).

또, 농업기술센타를 중심으로 재배 및 생산관리 표준화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지역별 표준화 기술실천을 위한 영농사업단지 구성,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패키지화 관리 등이 시도된다.

■ 화학비료 사용 감축을 위해 논외 지력증진사업을 강화

친환경적인 쌀 생산을 위해 논외 지력증진사업 강화를 위한 화학비료 사용 감축이 시도된다. 따라서 질소질비료는 정부지원에서 제외하고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며, 유효규산 함량 부족논을 대상으로 규산질비료를 시비하고 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읍면별로 공급계획을 세워 4년 1주기 기준으로 연차적 공급).

그리고, 오염 농경지, 경사지, 고령지 등 물리 화학성 개선이 필요한 농경지에 객토를 실시하여 안전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 종자대 지원' 등을 통해 겨울철 논은 논에 녹비작물 재배로 토양 유기물 함량을 증대시키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 RPC를 고품질쌀 생산·유통의 중심체로 육성

고품질쌀의 생산·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RPC의 역할 제고가 이루어지며,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RPC와 농업인간 고품질벼 계약재배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계약재배실적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RPC간 경쟁유도
- 우수 RPC의 「계약재배 성공 수범사례」를 수집·홍보실시
- RPC 관계자에 대한 고품질 쌀 생산·유통교육 실시
- RPC의 계약재배품종을 사전 예시하여 품종 통일 유도
- 계약재배내용에 품종, 농약사용, 시비관리·수확시기 등을 포함하고 계약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산물벼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조·저장시설 조기 확충

- 수확기 원료벼 매입량인 1,100만석(벼 224만톤)까지 처리능력 확대
- RPC의 건조·저장시설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민간사업자와 생산자단체간 지원조건 차이도 축소
- ※ 지원단가 : ('99) 450 → (2003) 450 → (2005이후) 500백만원

■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유통기반의 조성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되는데,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제도 정비 등이 이루어진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된 포장양곡 표시제도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강화
 - 불이행 및 허위표시의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추진
(현행 양곡관리법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해 제재효과가 미흡)
- 소비자단체와 함께 시중유통 브랜드 쌀에 대한 점검·평가기능을 강화하여 브랜드 쌀 품질관리체제 구축 촉진

※ 2003년도 브랜드쌀 평가

- 시행주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0개 회원단체
- 평가대상 : 인지도 등을 기준으로 시·도에서 추천한 51개 브랜드
- 평가기준 : 쌀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종 혼합여부, 외관상 쌀의 품위 등을 전문기관에서 평가하고, 소비자 및 전문패널의 식미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우수브랜드를 선정(12개)
-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점검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시중 유통쌀 품질 점검·평가기관 설립 유도
- 고품질 쌀 시장 확대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
고품질 쌀 식별방법 및 상미기간을 감안한 계절별 적정 구매단량, 취반방법, 가정내 보관방법 등 고품질쌀 소비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

RPC 등 산지유통업체 경영혁신

| 추진배경 | 정부수매기능 위축에 따라 민간유통기능 확충 필요

WTO 보조금 감축에 따른 정부수매기능 위축에 대응하여 RPC 등 산지유통업체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높은 원료곡 매입가격, 경영능력 부족, 공급과잉 상황에 따른 계절 진폭 축소, 과당경쟁 등으로 RPC의 경영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품질고급화 및 농가의 산물벼 처리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RPC의 수확기 처리능력 부족으로 고품질 쌀 유통에 대한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건조·저장능력이 600만석 수준에 불과해 일부 물량은 야적이 불가피하며('02년 농협야적물량 : 자체매입량의 10%인 425천석), 이는 미질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 동안 수확 후 일관처리체계 구축을 통한 비용절감에 집중하여 왔으나 산지유통의 핵심체로서 RPC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RPC의 구조조정 및 수익성 제고 등을 통해 경영을 혁신하고, RPC의 수확기 처리능력을 생산량의 40% 수준까지 확대하여 고품질쌀 생산·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자 한다.

▶ RPC 경영악화 실태

- 2002년 농협 RPC의 65%인 129개소가 적자 시현
- 사업여건이 악화된 '97년 이후 부도 RPC가 25개소

| 추진방안 | 경영평가를 통한 RPC 구조조정 촉진

■ RPC 경영평가 실시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정부자금지원 희망 RPC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RPC 경영평가 개요

-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기준, 평가방법을 마련
 - 평가기준은 영업이익 등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되, 수확기 원료곡 확보, 고품질쌀 생산능력 등도 반영
- 경영평가는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생산자단체와 민간사업자를 구분평가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RPC는 집중지원하고, 미흡한 RPC는 지원감축으로 통합 유도
 - 통·폐합 및 사내분사화 대상 RPC를 선정하여 경영혁신 추진
 - 평가결과를 농협 등 관련단체와 협조, 연계 추진방안 강구

■ 책임경영체제 확립

규모화를 통한 경영개선을 위해 RPC간 통합·합병을 유도하고 사내분사제 등을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통·폐합 세부추진방안

- 추진방안 : 연합 RPC 또는 합병(자율통합 유도)
 - 통합RPC는 조합경영과 분리하여 책임경영체제 구축
- 추진대상 : 3년 이상 적자시현 RPC, 경영평가결과 하위 RPC, 전체 RPC가 적자인 시·군 RPC
- 지원방안 : 통합 RPC에 대해서는 운영·시설자금 지원 시 우대

■ 사내 분사 추진방안

- 추진대상 : 희망조합 RPC, 연합 RPC를 중심으로 도입 추진
 - 사내분사제 도입 RPC수(누적) : (2004) 10개소 → (2013) 50개소
- 추진방향 : 협약 범위 내에서 완전 자율경영(독립성강화)
 - 분사장의 책임경영을 위해 판매와 손익목표만 부여하고 기타사항은 분사장에 권한 위임
 - 분사장은 직원대상 공모 또는 외부전문가 임명
- 농협중앙회를 통해 관련규정 및 운영준칙 마련
 - 직제·급여·직무범위규정 등 분사운영 협약서 표준안 마련
- 사후관리 : 결산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등 우대

■ RPC 경영컨설팅 지원단 구성

RPC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기술·판매 전문가 등으로 RPC 경영컨설팅 지원단도 구성된다.

■ RPC 경영컨설팅 지원단 구성 개요

- 조직 : 농림부, 농관원, 농협, 민간협회, 유통전문가로 구성
- 역할 : 경영부실 RPC 경영컨설팅자문, 관리방안 마련 등
- 컨설팅 대상 : 경영부실 RPC(2년이상 적자 시현)
- 컨설팅 진단 : 사업전반의 중점사항을 진단
- 컨설팅은 농협 및 RPC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연1회 이상 실시

■ RPC 수탁판매 활성화

마지막으로 RPC 경영개선과 수확기 취급물량 확대를 위해 수탁판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 동안 정부의 수매비중이 높고, RPC는 큰 계절진폭을 활용한 매취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왔으며, 농가도 경영규모가 작고 생산량이 많지 않아 수탁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향후 정부수매량의 축소 및 공공비축제의 도입, 농가의 경영규모화, 계절진폭 축소 등을 감안할 때 수탁판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RPC 수탁판매 활성화 전략 개요

- 단기 : 농가와 RPC간 자율적인 사업으로 추진
 - 제도의 일관성과 활성화를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고품질쌀 계열화사업과 연계, 수탁판매 유도
 - 농가와 RPC가 협의하여 정산시기, 정산방법(가격 등) 결정
 - 수탁량은 농가희망, RPC 저장능력 등 감안 자율 결정하되, 품종통일 및 재배관리를 표준화하고 수탁물량은 별도관리
- 중장기 : 공공비축제 도입과 함께 활성화 유도
 - 기본방향 : 최종 판매가격에 의한 공동계산제 도입
 - 계약단계부터 선도금을 지급하고 최종판매 후 일괄정산
 - 가공출하비용 등 필요경비는 표준원가모델을 선정하여 합리적인 산정기준 마련
 - 촉진방안 : RPC 회원제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을 발굴

V

질의응답

질의 응답

1) 이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쌀 시장을 개방했는데 왜 또 쌀 협상을 해야 하는가

지난 '95년부터 우리나라는 매년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형태로 쌀 시장이 제한적으로 개방되어 있었으며, 금년에는 20만5천톤을 수입해야 합니다. UR 협상 시 우리 정부는 쌀에 대해 특별조치를 인정받아 10년간 관세화를 이행하지 않는 대신에 일정 물량의 쌀을 수입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UR 농업협정문 부속서에는 관세화 유예의 지속여부에 관해 2004년에 협상을 시작하고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지난 10년 간 허용된 유예기간이 금년에 만료됨에 따라 어떠한 조건에서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 협상하는 것입니다.

2) 금년 쌀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은

쌀 협상에서 정부는 관세화유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상대방의 요구들을 고려하면서 실리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WTO 농업협정문에는 관세화 유예를 할 경우에 상대국이 수용 가능한 양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국은 2004년의 경우 소비량의 4%로 되어 있는 의무 수입량의 추가증량 등 유예에 따른 대가를 요구해 올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이러한 상대국들의 요구조건, DDA 농업협상이 가시화될 경우의 관세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쌀 산업 피해 최소화에 협상의 최종목표를 두겠습니다.

정부는 협상과정을 국민들에게 가능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업인들과 대화를 통해 이해와 의견을 구하면서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또한 개방폭 확대에 대비한 쌀 산업 보완 대책 및 농가소득 안정장치 강화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관세화하는 경우와 관세화를 유예하는 경우, 유·불리는

관세화를 유예하는 경우와 고율관세로 관세화하는 경우 모두 지금보다 개방의 폭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관세화 유예와 고율 관세화 모두 장·단점이 있어 현재 상태로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세화 유예시에는 합의된 의무 수입량만 수입되므로 연도별 쌀 수입량의 예측이 용이한 반면, 유예 대가로 의무 수입 물량 증량을 포함한 상대국의 과도한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화 시에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과도한 의무수입물량 증량은 피할 수 있으나, 국제가격, 환율변동, 관세 감축 등에 따라 수입량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수입량 등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유·불리를 판단해야 하고, 또한 DDA 협상에서 결정될 세부원칙(Modality)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관세화 유예를 할 경우 연도별 의무수입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무수입물량 수준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수입 방식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DDA 협상의 지연으로 의무수입 물량 증량 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인 바 상대국과의 협상 진행 과정에서 여러 대안간 분석작업을 통해 우리측 실리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쌀을 고율 관세화 할 경우 구체적인 관세율은 어느 정도인지

관세화 유예를 전제로 한 협상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인 수치를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농업 협정에 명시된 계산지침에 따라 '86~'88년 평균 국내외 가격차이에 해당하는 관세상당치(TE)에서 1/10을 감한 수준에서 신중하게 결정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참깨의 경우, 기준 년도 국내외 가격차는 700%이었는데 '95년부터 2004년 까지 10년 간 1/10이 감축되어 금년도 관세율은 630%가 적용됩니다.

6) 향후 쌀 협상절차는

협상절차는 먼저 협상 개시의사를 WTO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WTO 사무국이 우리 통보내용을 회원국들에게 전달하고, 관심국가는 90일 이내 협상 참가의사를 표명하게 됩니다. 그 후 참가의사 표명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결과를 WTO에 통보한 후 전체 WTO 회원국들로부터 검증절차(3개월)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7) 만약 올해 안에 협상이 종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농협 협정문 부속서에는 관세화 유예조치가 계속되지 않는 경우 일반관세로 전환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협상 결렬 시 자동적으로 관세화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협상 시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상대국들의 이익제기가 가능하고 분쟁절차로 갈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8) DDA 농업협상 지연이 쌀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DDA 세부 원칙 협상에서 결정되는 관세감축 및 의무수입량(TRQ)과 이행 계획서 검증과정에서 결정될 개도국 지위 여부 등 쌀 협상 대안 선택의 객관적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국의 요구조건, DDA 협상 진행 시나리오별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협상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TRQ 증량요구 예측

[Modality결과(일반원칙)에 따른 증량]

+ [원칙에서 이탈하는 데 대한 보상]

9)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금년 쌀 협상의 전망은

DDA 농업협상의 세부 협상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협상 대안간의 득실을 분석하기가 곤란하고, 쌀 협상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커서 협상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들 상대국이 관세화 유예를 조건으로 지나친 요구를 할 경우에는 협상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기본 입장으로 하여 협상을 추진하되, 관세화 유예냐, 관세화냐의 이분법적인 명분 논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가?”라는 실리를 추구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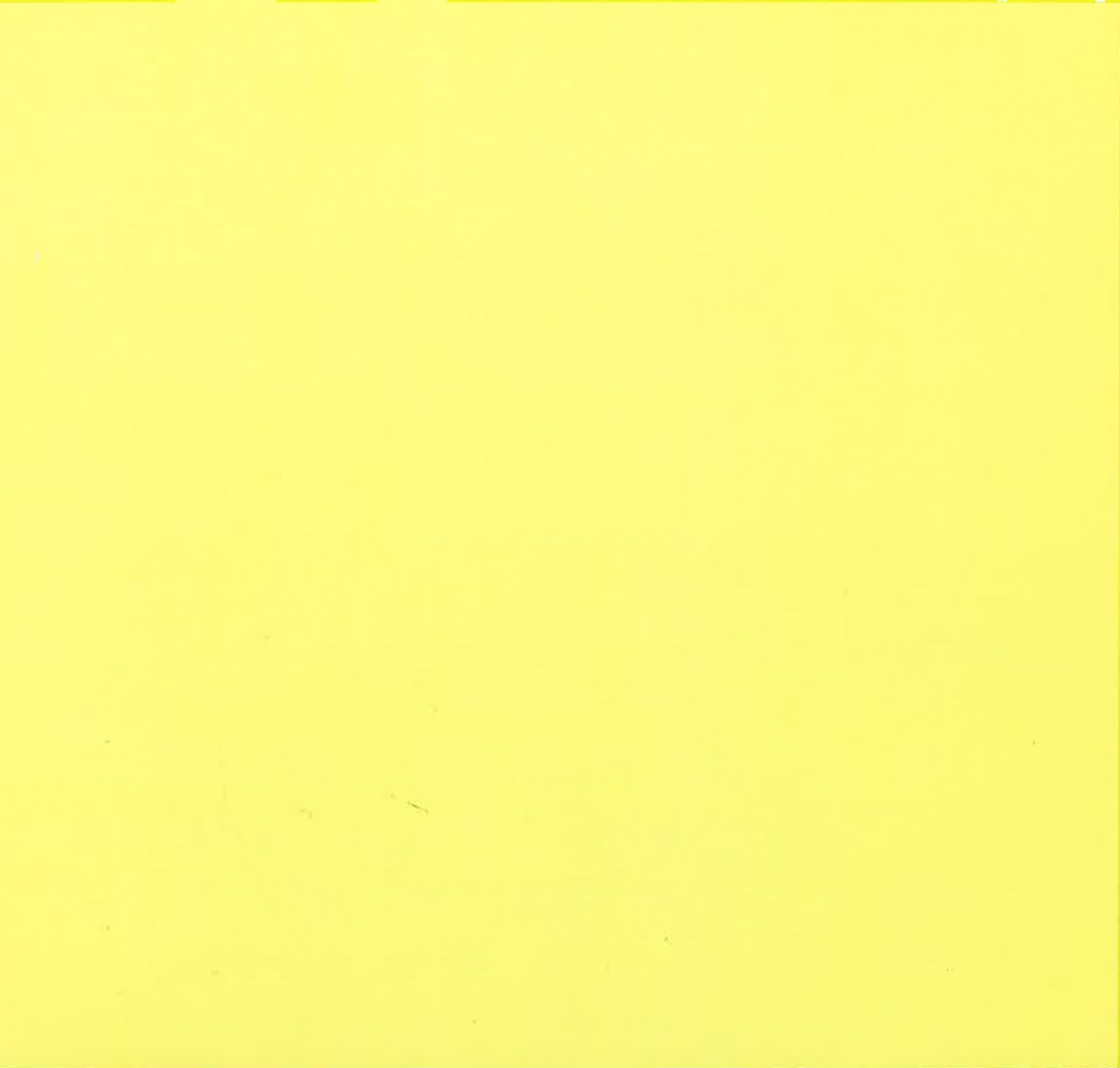
10) 쌀 협상에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쌀 협상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인식을 모두가 같이 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신축성 유지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정부는 쌀 협상을 진행하면서 주요 단계마다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농업인, 농민단체와의 정례적인 협의회를 개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쌀 협상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쌀 협상 주요 쟁점들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며, 열린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농업인, 국민과 함께 쌀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VI

부록



1. 주요 쌀 생산국 쌀 산업 현황

1) 미국

■ 경제 및 농업의 위치

미국의 1인당 연간 쌀(백미) 소비량은 1999년 기준으로 9kg이며, 농업은 GDP의 2%를 차지하고, 노동력의 2.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미국 경제 및 농업의 위치

항 목	단위	1998	2001	2002
국민 총소득(GNI)	US\$	8조4천억	9조8천억	10조1천억
1인당 GNI	US\$	30,700	34,400	35,060
국내 총생산(GDP)	US\$	8조7천억	10조1천억	10조4천억
GDP중 농업비중	%	1.6	-	-

※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www.worldbank.org)

■ 농산물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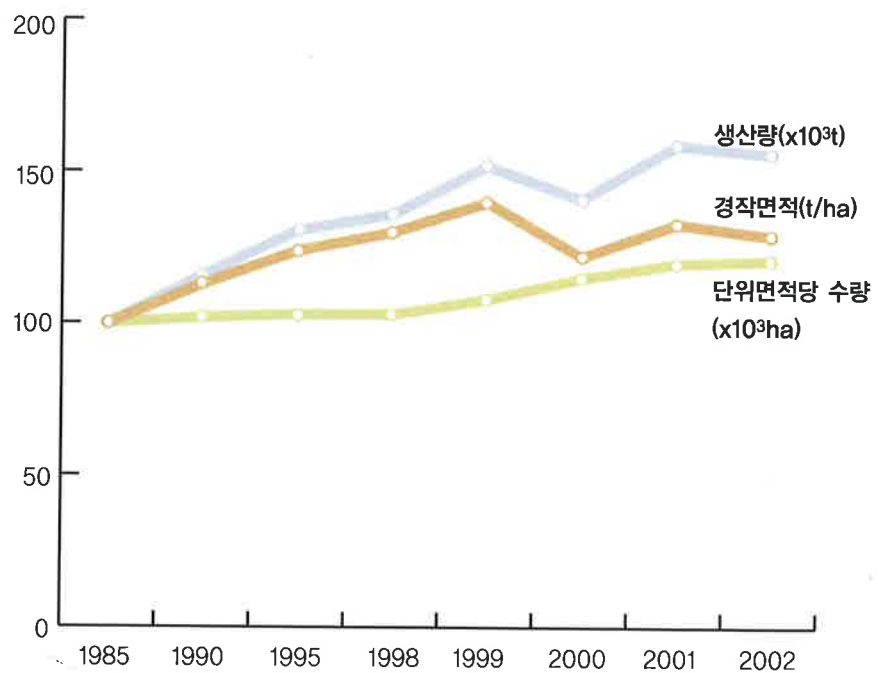
미국은 세계 최대의 농업생산국으로서 전 세계 곡물의 15%를 생산한다.

세계 주요 농산물 생산에서 미국의 점유율(2002년)

	미 국(백만t)	세계(백만t)	점유율(%)
곡 물	299	2,029	15
밀	44	573	8
옥수수	229	603	38
대 두	74	180	41
쌀	9	576	2
쇠고기	12.4	61.0	20
돼지고기	8.9	94.2	9
닭고기	14.7	63.4	23

※자료 : FAOSTAT

미국의 쌀 경작면적, 단위면적당 수량, 생산량



※주 : 제시된 수치는 "1985=100"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 농산물 무역

미국산 농산물 수출액 상위 5개국('98년)

	수출액(억US\$)	시장점유율(%)	전년비(%)
일 본	95	18	-13
E U	85	16	-6
캐나다	70	13	6
멕시코	60	11	15
한 국	22	4	-47
총 계	536	100	-

※자료 : 미 농무부 「U. S. Agricultural Export Value by Region」

세계 농산물무역(수출)에서 미국의 시장점유율(2001년)

	세 계(백만US\$)	미 국(백만US\$)	시장점유율(%)
농축산물	412	57	14
곡 물	36.0	9.8	27
밀	14.6	3.4	23
옥수수	8.9	4.8	54
쌀	7.0	0.7	10
대 두	10.4	5.5	53
쇠고기	2.5	0.4	16
오렌지	1.9	0.3	16

※자료 : FAOSTAT

※주 : 밀은 밀가루를 포함

■ 농업 동향

2003년도 1월 기준 2002/2003 마케팅년도 미농산물 수출량은 2001/2002 마케팅년도에 비해 밀은 4% 감소, 옥수수는 2% 감소, 쌀은 12% 증가, 대두 12% 감소, 대두박은 20% 감소, 대두유는 9% 감소, 면화는 2% 감소하였다.

2) 중국

■ 경제 및 농업의 위치

중국 국내 총생산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 총액의 증가로 1998년 19%에서 2002년 15%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중국 경제 및 농업의 위치

항 목	단위	1998	2001	2002
국민 총소득(GNI)	US\$	9,219억7천만	11,313억4천만	12,095억2천만
1인당 GNI	US\$	740	890	940
국내 총생산(GDP)	US\$	9,463억천만	11,592억천만	12,371억4천만
GDP중 농업비중	%	19	15	15

※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www.worldbank.org)

■ 농산물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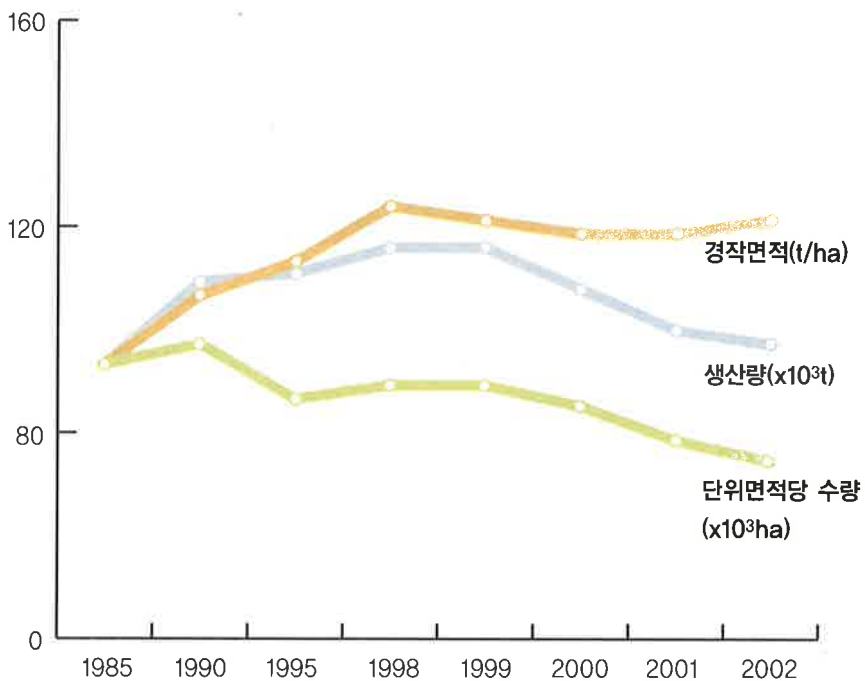
생산 측면에서는 주요곡물의 생산량 증가는 미미하나 가축사육 마리 수가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다.(2002년 기준)

중국의 농산물 생산 현황

구 분	1998	2001	2002
주요곡물계 (백만톤)	206	212	215
밀 (〃)	36	38	38
호밀 (〃)	14	14	14
옥수수 (〃)	52	46	50
대 두 (〃)	17	16	17
쌀 (〃)	63	61	62
보리 (〃)	24	37	34
주요가축계 (천두)	510,953	564,266	574,793
소(천두)	99,408	106,086	106,175
돼지 (〃)	408,424	454,409	464,695
닭 (〃)	3,121	3,771	3,923

※자료 : FAOSTAT

중국의 경작면적, 단위면적당 수량, 생산량



※주 : 제시된 수치는 "1985=100"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 농산물 무역

쌀 교역 부분에서 중국은 1995년과 1996년에는 수입이 더 많았으나, 그 이후 쌀 순수출국이 되었다. 1998년과 1999년에는 중국이 물량기준 세계 4위의 수출국이 되었다.

농산물 무역 수치

(2001년 기준)(단위: 백만US\$)

구 분	수 출	%	수 입	%	수 지
총 상품	580,824	100.0	553,900	100.0	△26,924
농축산물	16,817	2.9	24,987	4.5	△8,170
식량(수산물제외)	11,083	1.9	15,799	2.9	△4,716
곡물	1,133	0.2	1,753	0.3	△620
육류(신선+냉장+냉동)	1,582	0.3	2,297	0.4	△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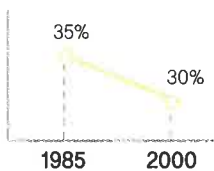
※출처 : FAOSTAT

※주 : 식량, 곡물, 육류는 농축산물에 대한 점유율(%)임

■ 쌀 산업현황

중국의 연간 1인당 쌀(백미) 소비량은 1999년 기준으로 90.7kg이나 쌀은 중국의 주식으로서 그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중국 국민의 칼로리 섭취량 중 쌀로 얻어지는 비율



중국은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으로 세계 총생산의 32~35%를 담당하며, 2000년에는 3억4천5백만톤이 생산되어 중국 총 곡물 생산량의 약 35%를 차지했다. 쌀 경작지 면적은 1970년대 중반 3,700만ha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오늘날에는 3,000만ha를 조금 넘고 있다.(Guandong 지방과 Zhejiang 지방의 감소가 두드러짐)

중국 최대의 쌀 생산지역은 Hunan 지방이며, 대부분의 쌀 생산은 충분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양쯔강(남부지방)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북부지방의 쌀 생산은 Heilongjiang, Jilin, Liaoning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중국 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9년 7.6%에서 1999년 13.3%로 높아졌다.

■ 벼 재배 현황

중국에서는 쌀 생산 지역의 90% 이상이 관개에 의해 이루어지며, 벼의 생장 조건은 지형과 날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동남부지방은 쌀 생산에 적합한 고온다우의 환경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연간 2기작(양쯔강 유역은 벼과 밀의 윤작을 많이 하고 있음)을 하며, 동북부 지역은 저온과 물 부족으로 쌀 생산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자포니카(japonica)가 대표적 품종이다.

■ 중국의 쌀 생산 제약요인과 촉진요인

생산 제약요인	생산 촉진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경지면적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벼 수확 면적은 지난 25년간 감소 • 1970년대 중반 총 경지면적의 26%였으나 최근에는 20%정도 • 북부지역은 수자원의 24%만을 가지고 있으나 경지의 65%가 속해 있어 용수 부족 문제가 심각 • 농업분야 노동력의 이탈 및 도시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과학자들은 세계 최초로 indica품종 벼의 게놈서열 초안을 마련 • 다양한 잡종을 개발하고 관개기술, 윤하건설을 추진하여 생산을 늘리고 물부족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경주 • 1980년대 부터 국제미작연구소(IRRI)와 협조연구를 하고 있음

3) 호 주

■ 농업 현황 (98/99년 기준)

호주 국가경제에서 농업은 전체 GDP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9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쌀(백미) 소비량은 7.9kg이다.

- 농업 인구 (농림수산) : 366천명
- 농업 규모
 - 곡물 및 유채류 : 19,863천ha
 - 주요 가축 사육두수 : 양 117.2백만두, 육우 22.67백만두, 유우 3.16백만두, 돼지 2.60백만두
- 농산물 총생산액 : 28,195백만 AU\$
 - 곡물류 : 14,973백만 AU\$
 - 축산물 : 13,221백만 AU\$

■ 주요 농산물 현황 (98/9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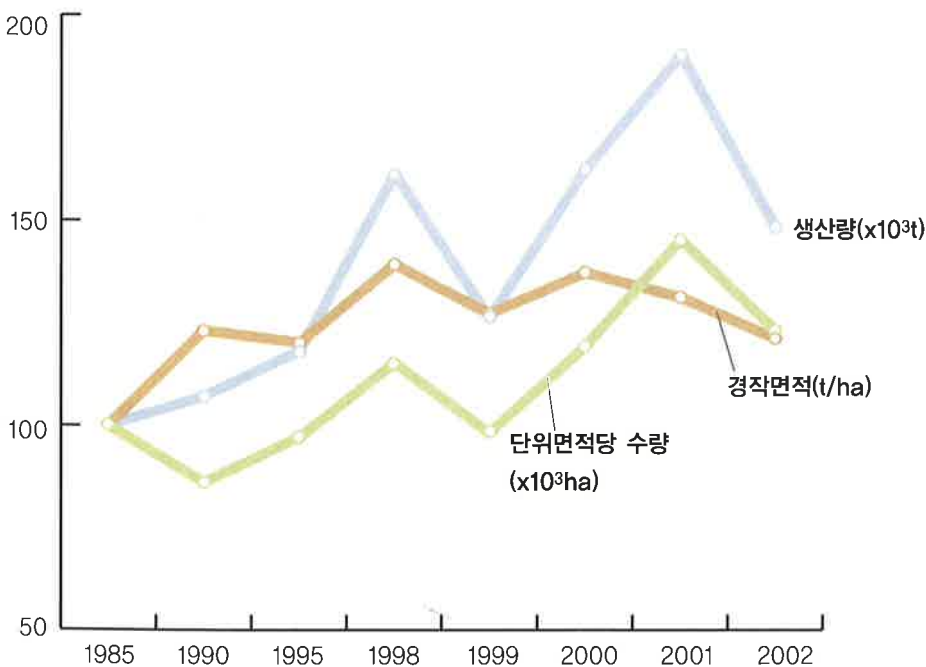
대부분의 관개농업은 New South Wales 의 Murray Darling Basin에서 이루어지며 농업생산물의 16%가 관개농업을 통해 얻어진다. 그리고 관개농업을 통해 얻은 농산물의 약 5%가 쌀이다.

쌀 단위면적당 수량은 1990년대 이후 상승하여 200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9.7톤/ha에 달했다.

호주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 (98/99년 기준)

구 분	면적(천헥타)	생산량(천톤)	수출(천톤)
쌀	152	1,390	637
밀	11,583	21,108	16,363
보리	2,994	5,375	4,703
귀리	909	1,557	281
옥수수	60	322	-
사탕수수	675	1,664	266
루피나스	1,274	1,421	969
캐놀라	1,171	1,664	1,320
면	553	700	647
양모	117.2	708	678
쇠고기(육우)	22.67	2,009	883
돼지고기	2.60	353	16
닭고기	-	614	18

호주 경작면적, 단위면적당 수량, 생산량



※주 : 제시된 수치는 "1985=100"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 농산물 무역

한·호주 농림축산물 교역 현황

(단위 : 천US\$)

구분	품목	1999	2000	2001	2002
수출	계	16,133	15,911	17,811	17,782
	농산물	14,597	14,831	14,891	14,664
	축산물	1,392	902	2,688	2,949
	임산물	144	178	232	169
수입	계	666,568	775,840	664,937	801,727
	농산물	415,810	486,368	383,169	430,683
	축산물	201,386	218,764	211,131	285,663
	임산물	49,372	70,708	70,637	85,381
무역수지		-650,435	-759,929	-647,126	-783,945

※주요 수출품목 : 라면, 젤라틴, 비스킷, 코코아웨이스트, 파스타류, 캔디 등

※주요 수입품목 : 밀, 쇠고기, 사탕수수, 원목, 치즈, 칩, 애완동물사료 등

4) 일 본

■ 경제 및 농업의 위치

일본 경제 및 농업의 위치

항 목	단위	1998	2001	2002
국민 총소득(GNI)	US\$	42,626억8천만	45,233억천만	42,656억1천만
1인당 GNI	US\$	33,720	35,610	33,550
국내 총생산(GDP)	US\$	39,405억1천만	41,414억3천만	39,787억8천만
GDP중 농업비중	%	2	-	-

※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www.worldbank.org)

■ 농산물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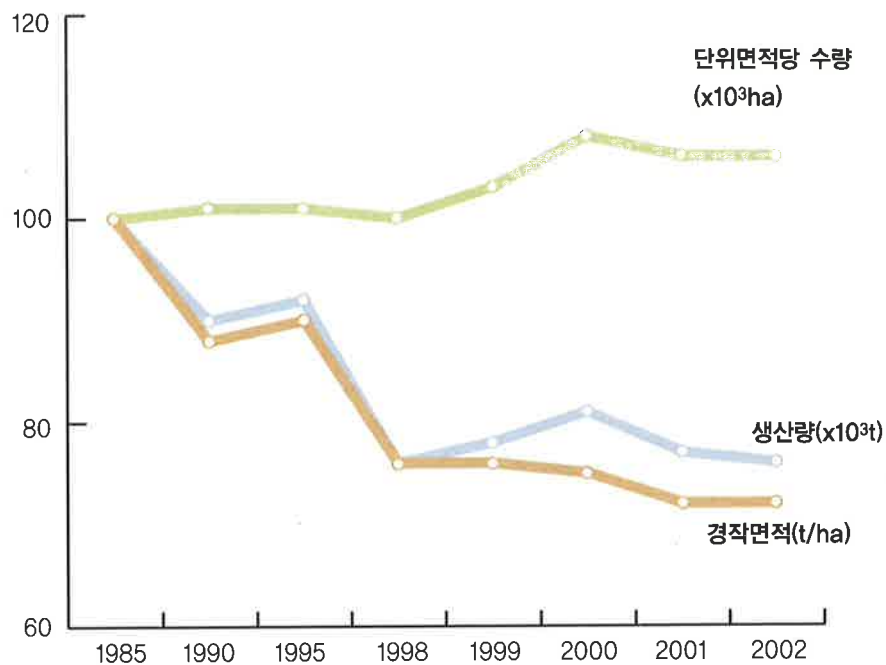
2002년 기준으로 주요곡물의 생산량은 예년과 비슷하고 가축사육 마리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농산물 생산 현황

구 분	1998	2001	2002
주요곡물계 (백만톤)	161	179	180
밀 (〃)	35	35	40
호밀(〃)	-	-	-
옥수수(〃)	24	24	24
대 두 (〃)	14	20	18
쌀(〃)	62	66	65
보리(〃)	26	34	33
주요가축계 (천두)	14,915	14,611	14,459
소(천두)	4,708	4,531	4,564
돼지(〃)	9,904	9,788	9,612
닭(〃)	303	292	283

※자료 : FAOSTAT

일본의 경작면적, 단위면적당 수량, 생산량



※주 : 제시된 수치는 "1985=100"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 농산물 무역

일본의 농산물 무역 현황(2001년)

(단위: 백만US\$)

구 분	수 출	%	수 입	%	수 지
총 상품	403,025	100.0	349,016	100.09	△54,009
농축산물	16,817	4.2	34,571	9.9	△17,754
식량(수산물제외)	1,753	0.4	24,334	6.9	△22,581
곡물	1,018	0.2	3,697	1.1	△2,679
육류(신선+냉장+냉동)	7	-	7,380	2.1	△7,373

※출처 : FAOSTAT

※주 : 식량, 곡물, 육류는 농축산물에 대한 점유율(%)임

■ 작물별 재배면적 및 경지이용율(2001)

2001년 재배면적은 452만ha로 경지이용율이 94.3%이며, 작물별로는 쌀이 37.7%로 가장 많고 비료작물 22.7%, 채소 13.4%순이다.

일본의 작물별 재배면적 및 경지이용율(2001)

(단위 : 천ha, %)

경지면적	재배면적							경 지 이용율
	계	쌀	비료작물	채소	맥류	과수	기타	
4,794	4,520 (100.0)	1,706 (37.7)	1,025 (22.7)	604 (13.4)	321 (7.1)	280 (6.2)	584 (12.9)	94.3%

※자료원 : 일본 농림수산성

■ 주요 품목의 식료자급율

일본의 식료자급율은 매년 하락 추세이며 특히 수입의존도가 높은 육류, 과실의 자급율이 낮은 편이다.

일본 주요 품목의 식료자급율

(단위 : %)

구 분	'90	'95	'98	'99	2000	2000/'90
쌀	100	103	95	95	95	△5.0
채 소	91	85	84	83	82	△9.0
과 실	63	49	49	49	44	△19.0
육 류	70	57	55	54	52	△18.0
쇠고기	51	39	35	36	33	△18.0
돈 육	74	62	60	59	57	△17.0
계 육	82	69	67	65	64	△18.0

■ 일본의 쌀 산업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촌 지역 노동력의 고령화, 영농규모의 영세성, 국내외의 쌀 가격차의 계속적 증가, 시장개방 압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쌀 산업을 비롯한 농업여건의 변화로 일본에서는 전업농으로서 벼농사만 짓는 경우가 별로 없고, 또한 일본에서 쌀 생산은 이미 수요량을 초과하여 쌀을 생산하던 논을 다른 작물 재배에 이용하도록 전환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쌀 산업도 국가경제에서의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버려진 산등성이 경지 등에 관한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 쌀 산업분야의 현황

일본에서 쌀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농산물 중 하나이며, 1999년 기준으로 1인당 쌀(백미) 소비량이 59.9kg이다. 그런데 1960년대에는 칼로리 섭취량의 47%, 단백질 섭취량의 28%가 쌀에 의해 이루어 졌으나 오늘날에는 그 비율이 각각 23%와 12%로 감소했다.

일본의 쌀 재배면적은 전체 작물재배면적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쌀 자급은 가능하지만 쌀 가격이 국제시장가격에 비해 매우 높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쌀 생산업자들이 일본시장에 진입하려 하지만 여러가지 무역규제로 어려운 실정이다.

WTO체제하에서 일본은 1986년에서 1988년 소비량의 7~8%에 해당하는 물량을 수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쌀 생산능력이 일본 내 쌀 수요를 초과하기 때문에 정부는 작물다양화를 독려하고 있다.

■ 쌀 생산의 제약요인과 촉진요인

제약요인	촉진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냉해가 북부지방에 피해를 종종 발생시키고 선선한 여름에 발생하는 도열병도 심각한 피해를 일으킴 ■ 정부의 보조금과 가격지지도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며 농가의 소득도 낮음 ■ 영농기계화가 거의 완전히 이루어졌으나 매우 높은 자가와 농업 노동력의 높은 기회비용으로 열대 아시아 국가들보다 생산비가 높음 ■ 젊은이들은 농업에 관심이 적으며 쌀은 주로 장년층에 의해 생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농림수산성 차원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 • 1991년에 쌀 계농연구 프로젝트 시작 ■ 생산비 절감과 선진기술을 이용한 생산성 증가와 다양한 용도로 논을 이용하는 것이 지속적 쌀 생산유지에 중요

5) 태 국

■ 농업현황

1999년 기준으로 태국에서 연간 1인당 쌀(백미) 소비량은 100.8kg이며, 2001년 기준 국가 전체 GDP 중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4%이다.

태국에서는 총 노동력의 5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비농업분야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농업이 GDP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농업이 여전히 주요 산업이며 금융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지면적은 전체 국토의 45.8%이며, 벼농사 지역이 국토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 기타 주요작물이 15%, 채소가 3%, 과수원이 4%, 보안림이 38% 차지
- 농경지 분포는 태국 북동부 및 북부지역에 주로 분포되며, 이 지역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농림어업 인구 : 30백만명(총인구의 50% 차지)
 - 농림어업 활동인구 : 21백만명(총 경제활동 인구의 57% 차지)

주요 생산작물은 벼, 카사바, 옥수수, 사탕수수 등이며, 생산량의 많은 물량을 수출하고 있다.

- 농산물 수출입현황(2001) : 수출 7,423백만US\$, 수입 2,923백만US\$
- 주요 수출국은 일본, 미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독일, 한국 등임

■ 주요 농업정책

최근 태국 농업정책의 주요 방향은 '농업 생산구조의 재편, 생산성 향상 등에 의한 세계시장에서의 농산물 경쟁력 유지·강화' 등이다.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농업생산 활동,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관리계획 등에 의한 자연자원의 보호와 지속적 농업개발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상 농가그룹에 적절한 교육, 기술지도, 저리 융자, 부채경감 등에 의한 인적자원 및 농업자 조직의 개발등의 세부 정책들이 추진 된다.

■ 경지이용

태국의 토지이용 현황

(단위 : 천rai=1,600sqm)

재배구분	면 적	비 율(%)
논	83,784	26
환금성 작물	48,463	15
채 소	88	3
과 수 원	14,608	4
보 안 림	123,394	38
기타(저수지, 군락 등)	50,352	16
계	320,689	100

※자료 : Land Development Department

■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태국의 주요 생산작물은 쌀, 타피오카, 사탕수수, 커피, 매니옥, 파인애플 등으로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태국의 주요 농작물 생산현황

구 분	'98	'99	2000
옥 수 수	4,617	4,389	4,571
천연고무	2,162	2,198	2,235
야 자 수	2,464	3,512	3,403
파인애플	1,786	2,353	2,281
쌀	22,784	23,313	23,402
사탕수수	50,331	53,494	5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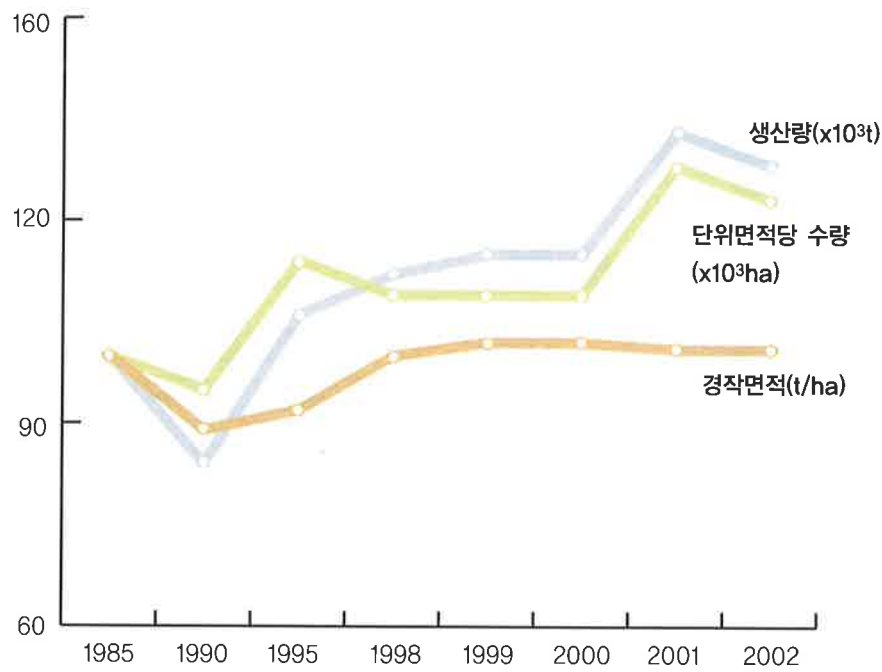
※자료 : FAO 생산통계 2000

■ 태국의 쌀 산업

태국의 쌀 생산은 녹색혁명(Green Revolution) 이후 20년간 1,240만톤에서 2,120만톤으로 증가하였다. 쌀은 태국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로서 가경지(可耕地, arable land) 중 벼 경작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5%에 이른다. 쌀 재식면적(planted area)은 1968년 690만ha에서 1988년 980만ha로 급증한 이후 세계 시장에서의 쌀 가격에 따라 900만ha와 1000만ha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다.

쌀 단위면적당 수량은 1968년 1.79톤/ha에서 1986년 2.15톤/ha으로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그 증가율은 낮은 편이다. 이는 천수답에서의 쌀 재배가 많고, 농가는 산출량은 적지만 고품질의 쌀을 재배하려하기 때문이다. 현재 쌀 단위면적당 수량은 2.33톤/ha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나, 1980년대 중반 농업기계화의 광범위한 진행으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 농가의 수익성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태국의 경작면적, 단위면적당 수량, 생산량



※주 : 제시된 수치는 "1985=100"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 쌀 교역

태국은 세계 1위의 쌀 수출국으로 현재 연간 약650만톤의 백미를 수출한다. 태국의 쌀 생산량은 정체되어 있으나 국내 쌀 소비량 감소 추세로 쌀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품질의 측면에서도 태국의 쌀은 고품질과 긴 낱알로 인기가 높은 편이다.

■ 쌀 생산의 제약요인과 촉진요인

제약요인	촉진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기후적 문제 외에도 농부들은 수확량 정체와 노동력 부족의 문제에 직면 • 우기의 평균 단위면적당 수량은 2톤/ha으로 정체되어 있음(국제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고품질의 aromatic쌀을 주로 심기 때문) • 보다 큰 제약요인은 농번기의 노동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청의 쌀 연구소가 쌀 연구의 담당기구로써 품종개량과 작물, 토양, 수자원 관리를 통한 쌀 생산성 강화에 역점 • 쌀 생산이 부적절한 지역에서의 대체작물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쌀 생산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윤작, 유기농업 강조

2. WTO구조

1) WTO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국제기구이다. WTO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WTO의 활동은 분쟁해결이다. WTO는 1995년 1월 1일에 출범했지만 그 무역체제는 반세기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48년 이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그 체제를 위한 규범을 제공해 왔다.

WTO는 회원국들의 것이다. 회원국은 그들이 참여하는 각종 이사회(councils)와 위원회(committees)들을 통해 의사를 결정한다. 이중 최고 권위를 갖는 것은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는 각료회의라고 할 수 있다(각료들은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첫 회의를 가졌으며, 1998년 스위스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가졌다). 1999년 회의는 미국에서 개최되었다. 각료회의는 다자간 무역협정(multilateral trade agreements)하에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

제2단계 조직은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이며 각료회의의 개최기간 사이의 일상업무는 다음 세 기구에 의해 운영된다.

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

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무역정책검토기구
(Trade Policy
Review Body)

▶ 합의도출 불가시 투표

WTO는 GATT의 전통적인 의사결정방식, 즉 투표가 아닌 합의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때로는 다자무역체제의 전체 이익을 위해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게 만든다.

합의 도출이 불가능할 경우 WTO 협정은 1국 1표 원칙의 투표 방식으로 과반수 표결을 허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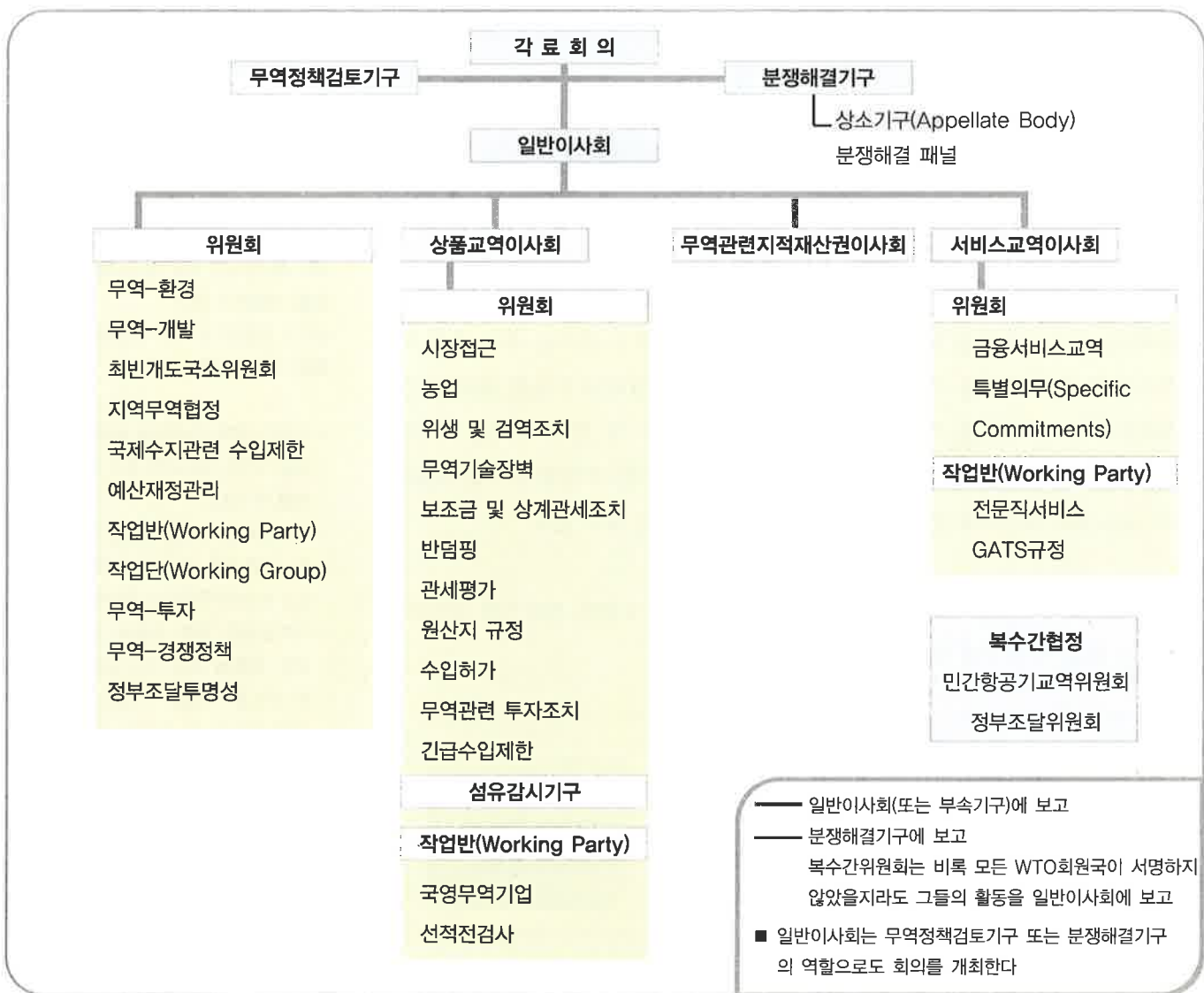
WTO 협정은 투표와 관련하여 네 가지 특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다자간 무역 협정문의 해석에 대한 결정은 WTO 회원국의 3/4 이상으로 채택될 수 있다.
- 각료회의는 다자간 협정에 입각하여 특정 회원국에 부과된 의무를 회원국 3/4 이상의 찬성으로 철회할 수 있다.
- 다자협정은 관련 규정의 성격에 따라 모든 회원국 **혹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은 이 규정을 승인한 WTO 회원국에게만 적용된다.
- 새로운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정은 각료회의 또는 일반이사회의 2/3 다수결로 승인된다.

2) WTO의 구조

모든 WTO 회원국은 상소기구(Appellate Body), 분쟁해결 패널(dispute settlements panels), 섬유감시기구(Textiles Monitoring Body), 복수간위원회(plurilateral committee)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및 위원회 등에 참석할 수 있다.

WTO의 구조



3) 대표단 및 그룹형성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네바에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때로는 WTO에 특명대사를 두기도 한다. 대표단의 실무자들은 WTO 본부에서 열리는 이사회, 위원회, 작업반과 협상그룹에 참석한다. 때로는 특정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본국에서 전문가 대표단이 직접 파견되기도 된다.

WTO 사무국은 제네바에 위치해 있다. 약 500명의 직원, 수퍼차이(Supachai Panitchpakdi) 사무총장(Director General)과 4명의 사무차장(Deputy Director General)이 있다. 사무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협상과 협정의 이행을 위해 WTO 부속기구(이사회, 위원회, 작업반, 협상그룹)에 대한 행정 및 기술지원
- 개발도상국가, 특히 최빈개도국(least-developed)에 대한 기술 지원
- WTO 경제학자와 통계학자들에 의한 무역현황(trade performance)과 무역정책 분석
- WTO 규정과 판례의 해석 및 무역분쟁해결에 있어서 법률전문가(legal staff)를 통한 지원
- 신규회원국을 위한 가입협상 업무 및 가입을 고려하는 국가에 상담 제고

3. 119조 투융자 종합계획

1) 투융자 방향

그간의 농업·농촌 투융자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추어 우선순위와 지원방식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투융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생산기반 정비 등 인프라 투자는 축소
- 농업구조조정, 소득·경영안정 지원분야와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 및 지역 개발 투자를 확대
- 엄격한 평가를 기초로 우수 농업인을 집중 지원하여 부채 유발을 최소화
 - 농가경영 컨설팅과 연계하고, 융자사업은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

그리고, 농립예산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투융자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우선 농업예산의 1/3 수준인 채무상환 등 경직성 경비를 감축하여 농업예산 구조를 건실화하고(일반회계의 비중을 확대하여 농특회계의 차입규모를 축소), 농특세는 농어촌 교육, 복지, 지역개발 분야에 지원할 방침이다(부처별로 분산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조정기능을 강화).

마지막으로 투융자 계획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3년 단위로 평가·조정함으로써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투융자의 효율 저하를 방지할 것이다.

2) 총 투융자 규모

■ 향후 10년간(2004~2013) 총 투융자 규모는 119조원 수준

- 예산 96조원(80%), 기금 23조원(20%)
- 보조 89조원(75%), 융자 30조원(25%)

■ 전반기 5년간(2004~2008) 총 투융자 규모는 51조원 수준

- 예산 40조원(78%), 기금 11조원(22%)
- 보조 37조원(74%), 융자 14조원(26%)
- 전반기 5년간 투융자 소요 51조원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총 투융자 규모

(단위 : 백억원, %)

구 분	합 계	'04~'08	%	'09~'13	%
예 산	9,630	3,994	41.5	5,636	58.5
- 보조	8,011	3,293		4,718	
- 융자	1,619	701		918	
기 금	2,299	1,057	46.0	1,242	54.0
- 보조	913	418		495	
- 융자	1,386	639		747	
합 계	11,929	5,051	42.3	6,878	57.7
지 방 비	1,663	660		1,003	
자 부 담	621	325		296	

3) 분야별 투융자 규모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는 투융자 비중을 확대하고, 생산기반 정비분야는 축소할 예정이다.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 ('03) 20.7% → ('08) 26.2 → ('13) 30.0
-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 ('03) 8.6% → ('08) 14.4 → ('13) 17.2
- 생산기반정비 : ('03) 32.6% → ('08) 15.7 → ('13) 8.8

그리고, 직접지불사업 투융자 비중을 '03년 9.4%에서 '08년 22.6%, '13년에는 22.9%까지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분야별 투융자 규모

(단위 : 백억원, %)

분 야 별	'03	%	'08	%	'13	%
농업 체질강화·경쟁력 제고	191	24.8	311	28.5	479	32.2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159	20.7	285	26.2	447	30.0
- 직접지불 사업	72	9.4	247	22.6	341	22.9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66	8.6	157	14.4	256	17.2
농산물 유통혁신	52	6.7	102	9.3	95	6.4
산림자원 육성	50	6.5	66	6.0	81	5.4
농업생산기반 정비	251	32.6	171	15.7	132	8.8
합 계	771	100.0	1,092	100.0	1,489	100.0

4.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5

1)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5(영문)

ANNEX 5

SPECIAL TREATMENT WITH RESPECT TO PARAGRAPH 2 OF ARTICLE 4

Section A

1.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4 shall not apply with effect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to any primary agricultural product and its worked and/or prepared products ("designated products") in respect of which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complied with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 treatment"):

- (a) imports of the designated products comprised less than 3 per cent of corresponding domestic consumption in the base period 1986-1988 ("the base period");
- (b) no export subsidies have been provid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base period for the designated products;
- (c) effective production-restricting measures are applied to the primary agricultural product;
- (d) such products are designated with the symbol "ST-Annex 5" in Section I-B of Part I of a Member's Schedule annexed to the Marrakesh Protocol, as being subject to

special treatment reflecting factors of non-trade concerns, such as food securi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in respect of the designated products correspond, as specified in Section of Part of the Schedule of the Member concerned, to 4 per cent of base period domestic consumption of the designated products from the beginning of the first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nd, thereafter, are increased by 0.8 per cent of corresponding domestic consumption in the base period per year for the remainde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2. At the beginning of any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 Member may cease to apply special treatment in respect of the designated products by complying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In such a case, the Member concerned shall maintain the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already in effect at such time and increase the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by 0.4 per cent of corresponding domestic consumption in the base period per year for the remainde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Thereafter, the level of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resulting from this formula in the final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shall be maintained in the Schedule of the Member concerned.
3. Any negotiation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can be a continuation of the special treatment as set out in paragraph 1 after the end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shall be completed within the time-frame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itself as a part of the negotiations set out in Article 20 of this Agreement, taking into account the factors of non-trade concerns.
4. If it is agreed as a result of the negoti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3 that a Member may continue to apply the special treatment, such Member shall confer additional and acceptable concessions as determined in that negotiation.
5. Where the special treatment is not to be continued at the end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the Member concerned shall implemen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In such a case, after the end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the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for the designated products shall be maintained at the level of 8 per cent of corresponding domestic consumption in the base period in the Schedule of the Member concerned.

6. Border measures other than ordinary customs duties maintained in respect of the designated products shall becom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4 with effect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in which the special treatment ceases to apply. Such products shall be subject to ordinary customs duties, which shall be bound in the Schedule of the Member concerned and applied,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in which special treatment ceases and thereafter, at such rates as would have been applicable had a reduction of at least 15 per cent been implemented over the implementation period in equal annual instalments. These duties shall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ariff equivalents to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prescribed in the attachment hereto.

Section B

7.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4 shall also not apply with effect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to a primary agricultural product that is the predominant staple in the traditional diet of a developing country Member and in respect of which the following conditions, in addition to those specified in paragraph 1(a) through 1(d), as they apply to the products concerned, are complied with:

- (a)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in respect of the products concerned, as specified in Section I-B of Part I of the Schedule of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 concerned, correspond to 1 per cent of base period domestic consumption of the products concerned from the beginning of the first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nd are increased in equal annual instalments to 2 per cent of corresponding domestic consumption in the base period at the beginning of the fifth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From the beginning of the sixth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in respect of the products concerned correspond to 2 per cent of corresponding domestic consumption in the base period and are increased in equal annual instalments to 4 per cent of corresponding domestic consumption in the base period until the beginning of the 10th year. Thereafter, the level of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resulting from this formula in the 10th year shall be maintained in the Schedule of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 concerned;

(b) appropriate market access opportunities have been provided for in other products under this Agreement.

8. Any negotiation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can be a continuation of the special treatment as set out in paragraph 7 after the end of the 10th year following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shall be initiated and completed within the time-frame of the 10th year itself following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9. If it is agreed as a result of the negoti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8 that a Member may continue to apply the special treatment, such Member shall confer additional and acceptable concessions as determined in that negotiation.
10. In the event that special treatment under paragraph 7 is not to be continued beyond the 10th year following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the products concerned shall be subject to ordinary customs dutie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 tariff equivalent to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prescribed in the attachment hereto, which shall be bound in the Schedule of the Member concerned. In other respects,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shall apply as modified by the relevan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accorded to developing country Members under this Agreement.

Attachment to Annex 5

Guidelines for the Calculation of Tariff Equivalents for the Specific Purpose Specified in Paragraphs 6 and 10 of this Annex

1. The calculation of the tariff equivalents, whether expressed as ad valorem or specific rates, shall be made using the actual difference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prices in a transparent manner. Data used shall be for the years 1986 to 1988. Tariff equivalents:
 - (a) shall primarily be established at the four-digit level of the HS;
 - (b) shall be established at the six-digit or a more detailed level of the HS wherever appropriate;
 - (c) shall generally be established for worked and/or prepared products by multiplying the specific tariff equivalent(s) for the primary agricultural product(s) by the proportion(s) in value terms or in physical terms as appropriate of the primary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worked and/or prepared products, and take account, where necessary, of any additional elements currently providing protection to industry.
2. External prices shall be, in general, actual average c.i.f. unit values for the importing country. Where average c.i.f. unit values are not available or appropriate, external prices shall be either:
 - (a) appropriate average c.i.f. unit values of a near country; or
 - (b) estimated from average f.o.b. unit values of (an) appropriate major exporter(s) adjusted by adding an estimate of insurance, freight and other relevant costs to the importing country.

2)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5(국문)

제4조 제2항과 관련한 특별대우

제1절

1.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와 동시에 아래 조건에 합치하는 1차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또는 관련 조제품("지정품목")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이하 "특별대우"라 한다)

가. 지정 품목의 수입이 1986-1988년 기준기간("기준기간")중의 해당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것

나. 기준기간 개시 이후 지정 품목에 대해 수출보조금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을 것

다. 동 1차 농산물에 효과적인 생산제한조치가 적용될 것

라. 이러한 품목은 식량안보 및 환경보호와 같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요소를 반영하는 특별대우의 대상으로서 마라케쉬의정서에 부속된 회원국의 양허표 제1부 제1절 B에 "ST-Annex 5"로 지정될 것, 그리고

마.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 제1부 제1절 B에 명시된 지정품목과 관련한 최소접근 기회는 이행기간의 제1차년도의 초부터 지정품목의 기준기간의 국내소비량의 4%에 해당하며, 그 이후 잔여 이행기간 동안 매년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0.8%씩 증가될 것

2. 이행기간 중 특정년도 초에 회원국은 아래 제6항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지정품목에 대한 특별대우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관련 회원국은 동 시점에서 이미 유효한 최소접근 기회를 유지하며, 잔여 이행기간 동안 최소접근 기회를 매년 기준기간에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0.4%씩 증가시킨다. 그 이후 이 공식으로 인한 이행기간 최종년도의 최소접근 기회 수준은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에 유지된다.

3. 이행기간의 종료이후, 제1항에 규정된 특별대우의 계속이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에 관한 협상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요소를 고려하여 이 협정 제20조에 규정된 협상의 일부로서 이행기간 그 자체의 시간범위내에서 종결된다.
4. 제3항에 언급된 협상의 결과로서 회원국이 특별대우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되는 경우, 동 회원국은 동 협상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허를 부여한다.
5. 이행기간 종료시 특별대우가 계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제6항의 규정을 이행한다. 이러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후 지정품목에 대한 최소접근 기회는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8% 수준에서 동 회원국의 양허표에 유지된다.
6. 지정품목과 관련하여 유지되는 일반관세 이외의 국경조치는 특별대우의 적용이 종료되는 연도 초부터 유효하게 제4조 제2항의 규정의 대상이 된다. 동 품목은 특별취급이 종료되는 연도 초부터 그리고 그 이후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에 양허되는 일반관세의 대상이 되며, 동 관세의 세율은 이행기간 동안 매년 균등하게 최소 15% 감축이 시행되었을 경우 적용될 수준이 된다. 동 관세는 이 부속서의 첨부물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계산되는 관세상당치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제2절

7.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또한 어느 개발도상회원국의 전통적 식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식이면서 그리고 제1항 가호로부터 제1항 라호까지에 명시된 관련품목에 적용되는 조건에 추가하여 아래 조건에 합치하는 1차농산물에 대하여는 세계 무역기구협정 발효와 동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관련 개발도상회원국의 양허표 제1부 제1절 B에 명시된 관련 품목에 대한 최소접근 기회는 이행기간 제1차년도의 초부터 동 품목의 기준기간의 국내소비량의 1%에 해당하며, 이행기간 제5차년도 초까지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2%로 매년 균등하게 증가된다. 이행기간 제6차년도 초부터 관련 품목에 대한 최소접근기회는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2%에 해당되며, 제10차년도 초까지 기준기간에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4%로 매년 균등하게 증가된다. 그 이후 이 공식으로 인한 제10차년도의 최소접근기회 수준은 관련 개발도상회원국의 양허표에 유지된다.

나. 이 협정의 다른 품목에 대하여 적절한 시장접근기회가 부여되었다.

8. 이행기간의 개시로부터 제10차년도가 종료된 이후 제7항에 명시된 특별대우의 계속어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에 관한 협상은 이행기간 개시 이후 제10차년도 그 해의 시간범위내에 개시되고 종결된다.
9. 제8항에 언급된 협상의 결과 회원국이 특별대우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 회원국은 동 협상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허를 부여한다.
10. 제7항에 따른 특별대우가 이행기간의 개시로부터 제10차년도 종료 이후 계속되지 않는 경우, 관련 품목은 이 부속서의 첨부물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계산되는 관세상당치에 기초하여 설정된 일반관세의 대상이 되며, 동 일반관세는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에 양허된다. 다른 측면에서는 제6항의 규정이 이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에게 부여된 관련 특별 및 차등대우에 의하여 수정되어 적용된다.

부속서 5에 대한 첨부물

이 부속서 제6항과 제10항에 명시된
특정목적을 위한 관세상당치 계산 지침

1. 종가세 또는 종량세로 표시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상당치의 계산은 투명한 방법으로 실제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1986년부터 1988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가 이용된다.

• 관세상당치는

가. 일차적으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4단위 수준에서 설정된다.

나.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6단위 혹은 보다 세분된 수준에서 설정된다.

다. 가공품 및/또는 조제품의 경우 동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1차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상당치에 적절히 가치기준 또는 물리적 기준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필요시 산업에 대해 현재 보호를 제공하는 모든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2. 외부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경우 실제 평균 운임·보험료 포함 단가가 된다. 평균 운임·보험료 포함 단가가 이용 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절할 경우

• 외부가격은

가. 인접국의 적절한 평균 운임·보험료 포함 단가가 되거나, 또는

나. 주요 수출국의 평균 본선인도 단가에 보험, 운임 및 수입국에 대한 다른 관련비용 추정치를 가산 하여 조정, 산정한다.

3. 외부가격은 일반적으로 가격 관련자료와 동일한 기간 동안의 연평균 시장환율을 사용하여 국내통화로 환산된다.
4. 국내가격은 일반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지배적인 대표도매가격 또는 적절한 자료가 없을 경우 동 가격의 추산치가 된다.
5. 최초 관세상당치는 필요한 경우, 품질 혹은 품종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적절한 계수를 이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이러한 지침에 따른 관세상당치가 음수이거나 혹은 현행 양허세율보다 낮은 경우, 최초 관세상당치는 현행 양허관세율이나 해당품목에 대한 국별 제안에 기초하여 설정될 수 있다.
7. 위의 지침에 따른 관세상당치 수준을 조정하였을 경우, 관련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한 해결책을 협상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기회를 제공한다.

5. 도하 각료회의의 선언문

1) 도하 각료회의의 선언문(영문)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WT/MIN(01)/DEC/1 20 November 2001 (01-5859)

MINISTERIAL CONFERENCE

Fourth Session

Doha, 9 – 14 November 2001

MINISTERIAL DECLARATION

Adopted on 14 November 2001

1.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embodied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economic growth, development and employment throughout the past fifty years. We are determined, particularly in the light of the global economic slowdown, to maintain the process of reform and liberalization of trade policies, thus ensuring that the system plays its full part in promoting recovery, growth and development. We therefore strongly reaffirm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set out in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pledge to reject the use of protectionism.
2. International trade can play a major role in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alleviation of poverty. We recognize the need for all our peoples to benefit from the increased opportunities and welfare gains that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generates. The majority of WTO Members are developing countries. We seek to place their needs and interests at the heart of the Work Programme adopted in this Declaration. Recalling the Preamble to the Marrakesh Agreement, we shall continue to make positive efforts designed to ensure that developing countries, and especially the least-developed among them, secure a share in the growth of world trade commensurate with the needs of their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context, enhanced market access, balanced rules, and well targeted, sustainably financ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building programmes have important roles to play.

3. We recognize the particular vulnerability of the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the special structural difficulties they face in the global economy. We are committed to addressing the marginalization of least-developed countries in international trade and to improving their 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e recall the commitments made by Ministers at our meetings in Marrakesh, Singapore and Geneva, an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Third UN Conference on Least-Developed Countries in Brussels, to help least-developed countries secure beneficial and meaningful integration in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the global economy. We are determined that the WTO will play its part in building effectively on these commitments under the Work Programme we are establishing.
4. We stress our commitment to the WTO as the unique forum for global trade rule-making and liberalization, while also recognizing that regional trade agreement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the liberalization and expansion of trade and in fostering development.
5. We are aware that the challenges Members face in a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cannot be addressed through measures taken in the trade field alone. We shall continue to work with the Bretton Woods institutions for greater coherence in global economic policy-making.
6. We strongly reaffirm our commitment to the obj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stated in the Preamble to the Marrakesh Agreement. We are convinced that the aims of upholding and safeguarding an open and non-discriminatory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acting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can and must be mutually supportive. We take note of the efforts by Members to conduct national environmental assessments of trade policies on a voluntary basis. We recognize that under WTO rules no country should be prevented from taking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of the environment at the levels it considers appropriate,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they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and are otherwis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WTO Agreements. We welcome the WTO's continued cooperation with UNEP and other inter-governmental environmental organizations. We encourage efforts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WTO and releva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al organizations, especially in the lead-up to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to be held in Johannesburg, South Africa, in September 2002.

7. We reaffirm the right of Member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to regulate, and to introduce new regulations on, the supply of services.
8. We reaffirm our declaration made at the Singapore Ministerial Conference regarding internationally recognized core labour standards. We take note of work under way i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on the 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9. We note with particular satisfaction that this Conference has completed the WTO accession procedures for China and Chinese Taipei. We also welcome the accession as new Members, since our last Session, of Albania, Croatia, Georgia, Jordan, Lithuania, Moldova and Oman, and note the extensive market-access commitments already made by these countries on accession. These accessions will greatly strengthe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s will those of the 28 countries now negotiating their accession. We therefore attach great importance to concluding accession proceedings as quickly as possible. In particular, we are committed to accelerating the accession of least-developed countries.
10. Recognizing the challenges posed by an expanding WTO membership, we confirm our collective responsibility to ensure internal transparency and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all Members. While emphasizing the intergovernmental character of the organization, we are committed to making the WTO's operations more transparent, including through more effective and prompt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nd to improve dialogue with the public. We shall therefore at the national and multilateral levels continue to promote a better public understanding of the WTO and to communicate the benefits of a liberal, rules-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11. In view of these considerations, we hereby agree to undertake the broad and balanced Work Programme set out below. This incorporates both an expanded negotiating agenda and other important decisions and activities necessary to address the challenges fac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ORK PROGRAMME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

12. We attach the utmost importance to the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 raised by Members and are determined to find appropriate solutions to them. In this connection, and having regard to the General Council Decisions of 3 May and 15 December 2000, we further adopt the Decision on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 in document WT/MIN(01)/17 to address a number of implementation problems faced by Members. We agree that negotiations on outstanding implementation issues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the Work Programme we are establishing, and that agreements reached at an early stage in these negotiations shall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7 below. In this regard, we shall proceed as follows: (a) where we provide a specific negotiating mandate in this Declaration, the relevant implementation issues shall be addressed under that mandate; (b) the other outstanding implementation issues shall be addressed as a matter of priority by the relevant WTO bodies, which shall report to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established under paragraph 46 below, by the end of 2002 for appropriate action.

Agriculture

13. We recognize the work already undertaken in the negotiations initiated in early 2000 under Article 20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including the large number of negotiating proposals submitted on behalf of a total of 121 Members. We recall the long-term objective referred to in the Agreement to establish a fair and market-oriented trading system through a programme of fundamental reform encompassing strengthened rules and specific commitments on support and protection in order to correct and prevent restrictions and distortions in world agricultural markets. We reconfirm our commitment to this programme. Building on the work carried out to date and without prejudging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we commit ourselves to comprehensive negotiations aimed at: substantial improvements in market

access; reductions of, with a view to phasing out,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substantial reductions in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We agree tha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all elements of the negotiations and shall be embodied in the Schedules of concessions and commitments and as appropriate in the rules and disciplines to be negotiated, so as to be operationally effective and to enable developing countries to effectively take account of their development needs, including food security and rural development. We take note of the non-trade concerns reflected in the negotiating proposals submitted by Members and confirm that non-trade concerns will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negotiations as provided for in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14. Modalities for the further commitments, including provisions for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hall be established no later than 31 March 2003. Participants shall submit their comprehensive draft Schedules based on these modalities no later than the date of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The negotiations, including with respect to rules and disciplines and related legal texts, shall be concluded as part and at the date of conclusion of the negotiating agenda as a whole.

Services

15. The negotiations on trade in services shall be conducted with a view to promoting the economic growth of all trading partners and the development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We recognize the work already undertaken in the negotiations, initiated in January 2000 under Article XIX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nd the large number of proposals submitted by Members on a wide range of sectors and several horizontal issues, as well as on movement of natural persons. We reaffirm the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the Negotiations adopted by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n 28 March 2001 as the basis for continuing the negotiations,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s stipulated in the Preamble, Article IV and Article XIX of that Agreement. Participants shall submit initial requests for specific commitments by 30 June 2002 and initial offers by 31 March 2003.

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

16. We agree to negotiations which shall aim, by modalities to be agreed, to reduce or as appropriate eliminate tariffs, including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ariff peaks, high tariffs, and tariff escalation, as well as non-tariff barriers, in particular on products of export interest to developing countries. Product coverage shall be comprehensive and without a priori exclusions. The negotiations shall take fully into account the special needs and interest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y participants, including through less than full reciprocity in reduction commitment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rticle XXVIII bis of GATT 1994 and the provisions cited in paragraph 50 below. To this end, the modalities to be agreed will include appropriate studies and capacity-building measures to assist least-developed countries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the negotiation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7. We stress the importance we attach to implement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Agreement) in a manner supportive of public health, by promoting both access to existing medicine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into new medicines and, in this connection, are adopting a separate Declaration.
18. With a view to completing the work started in the 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ncil for TRIPS)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23.4, we agree to negotiate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system of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and spirits by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We note that issues related to the extension of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23 to products other than wines and spirits will be addressed in the Council for TRIPS pursuant to paragraph 12 of this Declaration.
19. We instruct the Council for TRIPS, in pursuing its work programme including under the review of Article 27.3(b), th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TRIPS Agreement under Article 71.1 and the work foreseen pursuant to

paragraph 12 of this Declaration, to examine, inter ali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and other relevant new developments raised by Members pursuant to Article 71.1. In undertaking this work, the TRIPS Council shall be guided by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set out in Articles 7 and 8 of the TRIPS Agreement and shall take fully into account the development dimension.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Investment

20. Recognizing the case for a multilateral framework to secure transparent, stable and predictable conditions for long-term cross-border investment, particularly foreign direct investment, that will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rade, and the need for enhanc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building in this area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1, we agree that negotiations will take place after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basis of a decision to be taken, by explicit consensus, at that Session on modalities of negotiations.
21. We recognize the need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for enhanced support for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in this area, including policy analysis and development so that they may better evaluate the implications of closer multilateral cooperation for their development policies and objectives, and human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To this end, we shall work in cooperation with other relevant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including UNCTAD, and through appropriate regional and bilateral channels, to provide strengthened and adequately resourced assistance to respond to these needs.
22. In the period until the Fifth Session, further work in the Working Grou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Investment will focus on the clarification of: scope and definition; transparency; non-discrimination; modalities for pre-establishment commitments based on a GATS-type, positive list approach; development provisions; exceptions and balance-of-payments safeguards; consultation and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Members. Any framework should reflect in a balanced manner the interests of home and host countries, and take due account of the development policies and objectives of host

governments as well as their right to regulate in the public interest. The special development, trade and financial need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s an integral part of any framework, which should enable Members to undertake obligations and commitments commensurate with their individual needs and circumstances. Due regard should be paid to other relevant WTO provisions. Account should be taken, as appropriate, of existing bilateral and regional arrangements on investment.

Interaction between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23. Recognizing the case for a multilateral framework to enhance the contribution of competition policy to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and the need for enhanc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building in this area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4, we agree that negotiations will take place after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basis of a decision to be taken, by explicit consensus, at that Session on modalities of negotiations.
24. We recognize the need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for enhanced support for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in this area, including policy analysis and development so that they may better evaluate the implications of closer multilateral cooperation for their development policies and objectives, and human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To this end, we shall work in cooperation with other relevant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including UNCTAD, and through appropriate regional and bilateral channels, to provide strengthened and adequately resourced assistance to respond to these needs.
25. In the period until the Fifth Session, further work in the Working Group on the Interaction between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will focus on the clarification of: core principles, including transparency, non-discrimination and procedural fairness, and provisions on hardcore cartels; modalities for voluntary cooperation; and support for progressive reinforcement of competition institu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capacity building. Full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y participants and appropriate flexibility provided to address them.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26. Recognizing the case for a multilateral agreement on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and the need for enhanc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in this area, we agree that negotiations will take place after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basis of a decision to be taken, by explicit consensus, at that Session on modalities of negotiations. These negotiations will build on the progress made in the Working Group on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by that time and take into account participants' development priorities, especially those of least-developed country participants. Negotiations shall be limited to the transparency aspects and therefore will not restrict the scope for countries to give preferences to domestic supplies and suppliers. We commit ourselves to ensuring adequate technical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both during the negotiations and after their conclusion.

Trade Facilitation

27. Recognizing the case for further expediting the movement,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including goods in transit, and the need for enhanc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in this area, we agree that negotiations will take place after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basis of a decision to be taken, by explicit consensus, at that Session on modalities of negotiations. In the period until the Fifth Session,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shall review and as appropriate, clarify and improve relevant aspects of Articles V, VIII and X of the GATT 1994 and identify the trade facilitation needs and priorities of Members, in particular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We commit ourselves to ensuring adequate technical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in this area.

WTO Rules

28. In the light of experience and of the increasing application of these instruments by Members, we agree to negotiations aimed at clarifying and improving disciplines under the Agreements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and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hile preserving the basic concepts, principles and effectiveness of these Agreements and their instruments and objective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participants. In the initial phase of the negotiations, participants will indicate the provisions, including disciplines on trade distorting practices, that they seek to clarify and improve in the subsequent phase. In the context of these negotiations, participants shall also aim to clarify and improve WTO disciplines on fisheries subsidies,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this sector to developing countries. We note that fisheries subsidies are also referred to in paragraph 31.

29. We also agree to negotiations aimed at clarifying and improving disciplines and procedures under the existing WTO provisions applying to regional trade agreements. The negotiation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30. We agree to negotiations on improvements and clarifications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The negotiations should be based on the work done thus far as well as any additional proposals by Members, and aim to agree on improvements and clarifications not later than May 2003, at which time we will take steps to ensure that the results enter into force as soon as possible thereafter.

Trade and Environment

31. With a view to enhancing the mutual supportiveness of trade and environment, we agree to negotiations, without prejudging their outcome, on:
- (i) the relationship between existing WTO rules and specific trade obligations set out i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 The negotiations shall be limited in scope to the applicability of such existing WTO rules as among parties to the MEA in question. The negotiations shall not prejudice the WTO rights of any Member that is not a party to the MEA in question;

(ii) procedures for regular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MEA Secretariats and the relevant WTO committees, and the criteria for the granting of observer status;

(iii) the reduction or, as appropriate, elimination of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to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We note that fisheries subsidies form part of the negotiations provided for in paragraph 28.

32. We instruct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in pursuing work on all items on its agenda within its current terms of reference, to give particular attention to:

(i) the effect of environmental measures on market access, especially in relation to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the least-developed among them, and those situations in which the elimination or reduction of trade restrictions and distortions would benefit trade, th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i)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ii) labelling requirements for environmental purposes.

Work on these issues should include the identification of any need to clarify relevant WTO rules. The Committee shall report to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and make recommendations, where appropriate, with respect to future action, including the desirability of negotiations. The outcome of this work as well as the negotiations carried out under paragraph 31(i) and (ii) shall be compatible with the open and non-discriminatory nature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hall not add to or diminish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under existing WTO agreements, in particular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nor alter the balance of these rights and obligations, and will take into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33.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in the field of trade and environment to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the

least-developed among them. We also encourage that expertise and experience be shared with Members wishing to perform environmental reviews at the national level. A report shall be prepared on these activities for the Fifth Session.

Electronic Commerce

34. We take note of the work which has been done in the General Council and other relevant bodies since the Ministerial Declaration of 20 May 1998 and agree to continue the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The work to date demonstrates that electronic commerce creates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rade for Members at all stages of development, and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reating and maintaining an environment which is favourable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We instruct the General Council to consider the most appropriat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handling the Work Programme, and to report on further progress to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We declare that Members will maintain their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until the Fifth Session.

Small Economies

35. We agree to a work programme, under the auspices of the General Council, to examine issues relating to the trade of small economies. The objective of this work is to frame responses to the trade-related issues identified for the fuller integration of small, vulnerable economies in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not to create a sub-category of WTO Members. The General Council shall review the work programme and make recommendations for action to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Trade, Debt and Finance

36. We agree to an examination, in a Working Group under the auspices of the General Counci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debt and finance, and of any possible recommendations on steps that might be taken within the mandate

and competence of the WTO to enhance the capacity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o contribute to a durable solution to the problem of external indebtednes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to strengthen the coherence of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ial policies, with a view to safeguard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from the effects of financial and monetary instability. The General Council shall report to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progress in the examination.

Trade and Transfer of Technology

37. We agree to an examination, in a Working Group under the auspices of the General Counci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transfer of technology, and of any possible recommendations on steps that might be taken within the mandate of the WTO to increase flows of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ries. The General Council shall report to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progress in the examination.

Technical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38. We confirm that technical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are core elements of the development dimension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we welcome and endorse the New Strategy for WTO Technical Cooperation for Capacity Building, Growth and Integration. We instruct the Secretariat, in coordination with other relevant agencies, to support domestic efforts for mainstreaming trade into national plan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strategies for poverty reduction. The delivery of WTO technical assistance shall be designed to assist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low-income countries in transition to adjust to WTO rules and disciplines, implement obligations and exercise the rights of membership, including drawing on the benefits of an open, rules-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Priority shall also be accorded to small, vulnerable, and transition economies, as well as to Members and Observers without representation in Geneva. We reaffirm our support for the valuable work of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 which should be enhanced.

39. We underscore the urgent necessity for the effective coordinated delivery of technical assistance with bilateral donors, in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and releva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intergovernmental institutions, within a coherent policy framework and timetable. In the coordinated delivery of technical assistance, we instruct the Director-General to consult with the relevant agencies, bilateral donors and beneficiaries, to identify ways of enhancing and rationalizing the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the Joint Integrated Technical Assistance Programme (JITAP).

40. We agree that there is a need for technical assistance to benefit from secure and predictable funding. We therefore instruct the Committee on Budget, Finance and Administration to develop a plan for adoption by the General Council in December 2001 that will ensure long-term funding for WTO technical assistance at an overall level no lower than that of the current year and commensurate with the activities outlined above.

41. We have established firm commitments on technical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in various paragraphs in this Ministerial Declaration. We reaffirm these specific commitments contained in paragraphs 16, 21, 24, 26, 27, 33, 38-40, 42 and 43, and also reaffirm the understanding in paragraph 2 on the important role of sustainably financ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building programmes. We instruct the Director-General to report to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with an interim report to the General Council in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and adequacy of these commitments in the identified paragraphs.

Least-Developed Countries

42. We acknowledge the seriousness of the concerns expressed by the least-developed countries (LDCs) in the Zanzibar Declaration adopted by their Ministers in July 2001. We recognize that the integration of the LDCs in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requires meaningful market access, support for the diversification of their production and export base, and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We agree that the meaningful integration of LDCs into the trading system and the global economy will involve efforts by

all WTO Members. We commit ourselves to the objective of duty-free, quota-free market access for products originating from LDCs. In this regard, we welcome the significant market access improvements by WTO Members in advance of the Third UN Conference on LDCs (LDC-III), in Brussels, May 2001. We further commit ourselves to consider additional measures for progressive improvements in market access for LDCs. Accession of LDCs remains a priority for the Membership. We agree to work to facilitate and accelerate negotiations with acceding LDCs. We instruct the Secretariat to reflect the priority we attach to LDCs' accessions in the annual plans for technical assistance. We reaffirm the commitments we undertook at LDC-III, and agree that the WTO should take into account, in designing its work programme for LDCs, the trade-related elements of the Brussels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consistent with the WTO's mandate, adopted at LDC-III. We instruct the Sub-Committee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to design such a work programme and to report on the agreed work programme to the General Council at its first meeting in 2002.

43. We endorse the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Developed Countries (IF) as a viable model for LDCs' trade development. We urge development partners to significantly increase contributions to the IF Trust Fund and WTO extra-budgetary trust funds in favour of LDCs. We urge the core agencies, in coordination with development partners, to explore the enhancement of the IF with a view to addressing the supply-side constraints of LDCs and the extension of the model to all LDCs, following the review of the IF and the appraisal of the ongoing Pilot Scheme in selected LDCs. We request the Director-General, following coordination with heads of the other agencies, to provide an interim report to the General Council in December 2002 and a full report to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all issues affecting LDCs.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44. We reaffirm that provisions for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are an integral part of the WTO Agreements. We note the concerns expressed regarding their operation in addressing specific constraints faced by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least-developed countries. In that connection, we also note that

some Members have proposed a Framework Agreement on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WT/GC/W/442). We therefore agree that all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provisions shall be reviewed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them and making them more precise, effective and operational. In this connection, we endorse the work programme on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et out in the Decision on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WORK PROGRAMME

45. The negotiations to be pursued under the terms of this Declaration shall be concluded not later than 1 January 2005.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will take stock of progress in the negotiations, provide any necessary political guidance, and take decisions as necessary. When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s in all areas have been established, a Special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will be held to take decisions regarding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hose results.
46. The overall conduct of the negotiations shall be supervised by a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under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Council.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shall hold its first meeting not later than 31 January 2002. It shall establish appropriate negotiating mechanisms as required and supervise the progress of the negotiations.
47. With the exception of the improvements and clarifications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the conduct, conclusion and entry into force of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shall be treated as parts of a single undertaking. However, agreements reached at an early stage may be implemented on a provisional or a definitive basis. Early agreement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 assessing the overall balance of the negotiations.
48. Negotiations shall be open to:
- (i) all Members of the WTO; and

- (ii) States and separate customs territorie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accession and those that inform Members, at a regular meeting of the General Council, of their intention to negotiate the terms of their membership and for whom an accession working party is established.

Decisions on the outcomes of the negotiations shall be taken only by WTO Members.

49. The negotiations shall be conducted in a transparent manner among participants, in order to facilitate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all. They shall be conducted with a view to ensuring benefits to all participants and to achieving an overall balance in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50. The negotiations and the other aspects of the Work Programme shall take fully into account the principle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embodied in: Part IV of the GATT 1994; the Decision of 28 November 1979 on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the Uruguay Round Decision on Measures in Favour of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all other relevant WTO provisions.
51. The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and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shall, within their respective mandates, each act as a forum to identify and debate developmental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the negotiations, in order to help achieve the objective of having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priately reflected.
52. Those elements of the Work Programme which do not involve negotiations are also accorded a high priority. They shall be pursued under the overall supervision of the General Council, which shall report on progress to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2) 도하 각료회의 선언문(국문)

서문

- 현재 세계적인 경제침체 상태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은 WTO가 추구하는 원칙과 목적을 재확인하고, 보호주의 조치를 억제하며 각국 무역정책의 개혁 및 자유화를 계속 추진토록 함
- 국제무역이 빈곤퇴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전제 하에 다자 통상체제로부터 생기는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 선언문에서 채택되는 모든 작업 계획이 개도국과 최빈국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함
- 무역자유화에 있어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도 인정하지만 세계무역규범형성 및 자유화를 위한 유일한 포럼으로서 WTO의 중요성을 확인함
-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고 세계경제정책 형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브레튼 우즈 기구 및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조를 계속함
-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다자통상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는 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일 수 있고 또 그래야 함을 확신함
각국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목적의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며, 그러한 조치가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함
- 국제적으로 합의된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싱가포르 각료 선언문 내용을 재확인하고,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작업에 대해 주목함
-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 작업이 금번 각료회의에서 마무리됨을 환영하고, 현재 진행중인 28개국의 가입 작업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끝나기를 희망함
- 모든 회원국의 효과적인 활동 참여 및 WTO의 내부적 투명성 증진을 보장할 공동의 책임을 확인하고, 정보 교류 및 대화의 장 제공을 통해 WTO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함
- 이러한 고려 하에 아래의 넓고 균형적인(broad and balanced) 작업계획을 추진함

이행 문제

- 일부 이행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금번 각료회의에서 결정을 채택
- 나머지 이행문제는 작업계획에 따라 처리함
 - 협상대상 분야의 이행문제는 협상에서 처리
 - 그 외의 분야의 이행문제는 관련 산하기구에서 검토, 그 결과를 2002년말까지 무역협상 위원회에 보고

향후 작업 계획

(1) 농업

-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의 수립이 장기 목표임을 확인
-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3대 협상분야별 협상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
 -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
 -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목표로 한 감축
 -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substantial reduction)
- 개도국 우대는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양허표 작성 및 규범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을 합의
-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이 협상의 고려사항임을 확인
- 협상방식(modalities) 수립 시한은 2003년 3월 31일, 양허안 제출시한은 5차 각료회의 이전으로 함
 - 단, 협상종결은 전체 뉴라운드 협상 종결과 합치

(2) 서비스

-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협상의 진전에 대한 만족을 표명
-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상의 서문, 4조, 16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함에 있어서 2001년 3월 28일 채택된 서비스협상 가이드라인이 그 기초가 됨을 재확인
- 양허안은 2002년 6월 30일 까지 요청, 2003년 3월 31일 까지 제출

(3) 비농산품을 위한 시장접근

- 침두관세, 고관세 및 경사관세 문제를 포함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 개시
- 협상대상 상품 범위는 포괄적이어야 하고 선택적 제외가 있어서는 안됨
-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이익 고려
- 이를 위하여 LDC들이 협상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할 세부원칙에는 필요한 연구(appropriate studies) 및 능력배양 프로그램 (capacity-building measures)를 포함토록 함

(4) 지적재산권

-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표시에 대한 통보 및 등록을 위한 다자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 마무리
- 지리적표시 보호를 여타 상품에도 확대하는 문제는 TRIPS 이사회에서 검토
- TRIPS 협정과 CBD(생물다양성협약) 간의 관계, 전통지식보호, 비 위반제소, TRIPS 협정이 신기술발전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TRIPS 이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룰 것에 동의

(5) 무역과 투자

- 국경 간 장기 투자 특히 무역확대에 기여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다자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case)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에 대한 개도국의 필요를 인정하며, 이를 위해 UNCTAD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 그리고 지역 또는 양자 채널을 통해 지원을 제공
- 제5차 각료회의까지 각종 요소의 명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 서비스협정의 접근방식에 기반한 범위 및 정의, 투명성, 비차별, 설립전 약속에 대한 조항 및 국가간 분쟁해결조항 등
 - 상기 다자규범은 투자국 및 유치국간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정부의 규제책임 및 경제개발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6) 무역과 경쟁정책

- 국제무역과 개발에 기여할 경쟁정책에 대한 다자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case)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에 대한 개도국의 필요를 인정하며, 이를 위해 UNCTAD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 그리고 지역 또는 양자 채널을 통해 지원을 제공
- 제5차 각료회의까지 각종 요소의 명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 투명성, 비차별 절차의 공정성, 중핵카르텔 규정을 포함한 핵심 원칙, 자발적 협력을 위한 방식(modalities), 능력배양을 통한 개도국 경쟁기관의 점진적 강화 등

(7) 정부조달 투명성

- 정부조달 투명성에 관한 다자협정 필요성 및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제고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 이 협상은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서의 진전사항에 기초하고, 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를 고려
- 협상은 투명성 분야에만 제한되어야 하며, 각국이 국내공급품 및 공급자를 선호할 여지를 제한하지 말아야 함

(8) 무역원활화

- 상품의 이동 통관을 촉진시킬 필요성 및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제고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 5차 각료회의시까지 상품이사회는 GATT 1994 협정 제5,8,10조의 유관 분야를 검토, 명확화,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회원국들의 무역원활화 수요 및 우선순위를 파악

(9) WTO 규범

-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의 협상 개시
 - 단,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및 그 수단, 목적은 유지
 -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무역왜곡적 관행을 포함하여 각국이 명확화 또는 개선을 희망하는 조항을 제시
- 동 협상의 맥락에서 일환으로 수산 보조금 관련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것도 목표로 함
- 지역무역협정에 적용될 WTO 조항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의 협상 개시

(10) 분쟁해결양해 개정

- 분쟁해결양해 개정에 대한 협상 개시
- 협상을 통해 2003년 5월 이전에 균형된 개정안을 도출해야 함

(11) 무역과 환경

- 무역과 환경의 상호 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아래 분야에 대한 협상을 개시
 - WTO 기존 규범과 MEA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
 - MEA 사무국들과 WTO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및 옵저버 자격 절차
 -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 수산 보조금이 규범 분야 협상의 일부임에 유의
- 무역환경위원회(CTE)는 현재 소관 범위내의 모든 의제에 대한 작업을 계속하되, 특히 다음에 주목
 -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 무역규제 및 왜곡을 철폐 또는 삭감하여 무역환경 개발에 도움이 되는 상황
 - TRIPS협정의 관련 규정
 - 라벨링 환경 목적의 라벨링 요건
- 상기 작업은 관련 WTO 규범의 명확화 필요성의 파악을 포함하고, CTE는 제5차 각료회의에 보고를 하며, 협상 필요성을 포함한 장래 작업에 관한 권고 제출
- 동 작업 및 para.31의 협상 결과는 다자무역체제의 비차별성과 조화되어야 하며, 기존 WTO 협정상 회원국의 권리 의무를 추가 또는 감소하지 말아야 하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변경하지 않으며,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의 필요를 감안

(12) 전자상거래

- 제네바 각료선언 이후 일반이사회 및 다른 기구에서 행해진 작업에 주목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작업계획을 계속함
- 일반이사회는 작업계획을 다룰 가장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 5차 각료 회의에 보고서 제출
- 5차 각료회의까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관행 연장

(13) 소규모 경제

- 일반이사회 감독하에 소규모 경제국(small economies)을 다자무역체제에 더 효과적으로 통합할 문제를 검토하는 작업 계획 수립

(14) 무역, 부채, 금융

- 일반이사회에서 무역, 부채, 금융간의 관계를 검토
 - 이 문제를 검토할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 5차 각료회의에 보고

(15) 무역과 기술이전

- 일반이사회에서 무역과 기술이전간의 관계 및 개도국에로의 기술이전을 촉진 할 가능한 권고 방안을 검토하고, 이 문제를 다룰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 5차 각료회의에 보고

(16) 기술협력 및 능력 배양

- 기술협력대상국이 WTO 규범을 보다 잘 이해하고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계획이 고안되어야 함. 또한 제네바에 대표부가 없는 국가를 우선시하여 기술지원이 행해져야 하며, 예산행정위원회가 보다 장기적인 기금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올해 12월 일반 이사회가 그 계획을 채택하도록 함

(17) 최빈개도국

- 최빈개도국의 무역체제 통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최빈개도국을 위한 작업계획 고안시 2001년 5월 제3차 UN 최빈개도국회의에서 채택된 브뤼셀 선언을 고려해야 함. 또한 최빈개도국을 위한 통합계획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기반한 신탁기금의 확대를 위해 노력함
- LDC 산품에 대한 무관세, 무쿼타 목표에 대한 약속을 확인

(18) S&D

- S&D 조항을 보다 정확하고 유효한 운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모든 관련 조항 검토
- 이행 관련 결정문 내용 중 S&D 작업계획 부분을 승인

(19) 작업계획의 조직 및 관리

- 협상일정
 - 협상종료시점 : 2005년 1월 1일
 - 제5차 각료회의는 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결정을 채택
 - 모든 분야의 협상종료시 특별 각료회의에서 동 결과를 채택
- 협상감독기구로 일반이사회 산하에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를 설치
 - 1차회의 개최 : 2002년 1월 31일 이전
- 협상방식 : single undertaking (DSU 개정은 예외)
(※ 전체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처리)
 - 그러나 조기 합의사항은 조기 시행 가능
- 협상 참가국 : WTO 회원국 및 가입협상 진행국
- 무역개발위원회와 무역환경위원회는 협상의 개발측면과 환경측면을 검토

6. 관련통계

1) 농림관련 주요 지표

농림부문 예산현황

(단위 : 억원)

		'01	'02	'03	('03/'02)%
국가전체예산(A)		1,050,454	1,150,985	1,194,946	3.8
농림부문예산(B)		85,434	90,097	96,713	7.3
농림부분부예산(C)		77,046	81,250	86,458	6.4
구성비(%)	B/A	8.1	7.8	8.1	
	C/A	7.3	7.1	7.2	
	C/B	90.2	90.2	89.4	
양곡증권정리기금운용규모		15,400	15,278	24,296	59.0
양특회계예산		11,586	12,382	15,936	28.7

※ 주 : 일반회계, 재특회계, 농특회계의 순계규모임

국민경제속의 농업비중

	단 위	'00	'01	'02
국내총생산	%	9.3	3.1	6.3
농림어업경제성장률	%	2.0	1.9	4.1
1인당 GNI	US\$	9,770	9,000	10,013
국내총생산(경상)	10억원	521,959	551,558	596,381
농업	10억원	31,828	32,448	32,147
(구성비)	(%)	(6.1)	(6.0)	(5.4)

※ 주 : 일본의 농림어업 비중(%)

- ('90) 2.5 → ('91) 2.3 → ('92) 2.2 → ('94) 1.7 → ('98) 1.8 → ('99) 1.5 → ('01) 1.6

농경지 면적

	총경지면적	논면적	구성비	밭면적	구성비	호당경지면적
	천ha	천ha	%	천ha	%	ha
'85	2,144	1,325	62	819	38	1.11
'90	2,109	1,345	64	764	36	1.21
'93	2,055	1,298	63	757	37	1.29
'94	2,033	1,267	62	766	38	1.30
'95	1,985	1,206	61	779	39	1.32
'96	1,945	1,176	60	769	40	1.29
'97	1,924	1,163	60	761	40	1.34
'98	1,910	1,157	61	753	39	1.35
'99	1,899	1,153	61	746	39	1.37
'00	1,889	1,149	61	740	39	1.36
'01	1,876	1,146	61	730	39	1.39
'02	1,862	1,138	61	724	39	1.39

※주 : 호당 경지면적(ha) - 일본('00)1.55, 미국('99)82

농가 호수 및 인구

	농가호수	비율	농가인구	비율	농임업취업자	비율
	천호	%	천명	%	천명	%
'85	1,926	20	8,521	21	3,554	23.7
'90	1,767	16	6,661	15	3,100	17.1
'93	1,592	14	5,407	12	2,734	14.1
'94	1,558	14	5,167	12	2,619	13.2
'95	1,499	11.6	4,851	10.8	2,419	11.8
'96	1,480	-	4,692	10.3	2,322	11.2
'97	1,440	-	4,468	9.7	2,276	10.8
'98	1,413	-	4,400	9.5	2,399	12.0
'99	1,382	-	4,210	9.0	2,264	11.2
'00	1,383	9.7	4,031	8.7	2,402	11.2
'01	1,354	-	3,933	8.3	2,105	9.9
'02	1,280	8.5	3,591	7.5	2,069	9.3

※주 : 1) 어가호수('02) : 92천호, 인구 : 252천명

2) 총 가 구('02) : 15,064천호, 총인구('02) : 47,640천명

3) 취 업 자('02) : 22,169천명

논 면적 규모별 농가 호수

연도별	전체농가호수	논있는 농가	0.5ha 미만	0.5~1.0	1.0~2.0	2.0~3.0	3.0ha 이상
	천호	천호					
'80	2,157	1,849	882	644	281	34	10
		(100%)	(47.9)	(34.8)	(15.1)	(1.8)	(0.5)
'85	1,926	1,643	712	592	287	33	9
		(100%)	(43.3)	(36.0)	(18.2)	(2.0)	(0.5)
'90	1,767	1,508	609	512	316	53	18
		(100%)	(40.3)	(34.0)	(21.0)	(3.5)	(1.2)
'93	1,592	1,322	531	430	274	57	29
		(100%)	(40.2)	(32.6)	(20.7)	(4.3)	(2.2)
'94	1,558	1,266	509	407	261	57	32
		(100%)	(40.2)	(32.1)	(20.6)	(4.5)	(2.5)
'95	1,501	1,205	496	379	241	56	34
		(100%)	(41.2)	(31.4)	(20.0)	(4.6)	(2.8)
'96	1,480	1,172	484	366	235	54	34
		(100%)	(41.3)	(31.2)	(20.0)	(4.6)	(2.9)
'97	1,440	1,143	477	357	221	53	35
		(100%)	(41.7)	(31.2)	(19.3)	(4.6)	(3.1)
'98	1,413	1,098	496	327	195	45	35
		(100%)	(45.1)	(29.8)	(17.8)	(4.1)	(3.2)
'99	1,382	1,064	489	316	187	40	32
		(100%)	(46.0)	(29.7)	(17.5)	(3.8)	(3.0)
'00	1,384	1,078	456	330	182	50	41
		(100%)	(42.2)	(30.6)	(18.8)	(4.6)	(3.8)
'01	1,354	1,054	462	313	193	46	40
		(100%)	(43.8)	(29.7)	(18.3)	(4.4)	(3.8)
'02	1,280	985	428	290	181	45	41
		(100%)	(43.5)	(29.4)	(18.4)	(4.5)	(4.2)

2) 양곡관련 주요 지표

쌀 산업관련지표

구 분	단 위	'95	'98	'99	'00	'01	'02
쌀생산액	억원	67,598	91,826	100,451	105,046	107,217	95,564
농업생산액중비중	%	26.1	31.0	31.5	33.0	31.9	29.7
GDP중비중	%	1.8	2.1	2.1	2.0	2.0	
쌀재배면적	천ha	1,056	1,059	1,066	1,072	1,083	1,053
호당재배면적	ha	0.88	0.96	1.00	-	1.00	1.07
쌀생산량(정곡)	천톤	4,695	5,097	5,263	5,291	5,515	4,927
호당생산량	톤	3.9	4.6	4.9	4.9	5.2	5.0
	(석)	(27)	(32)	(34)	(34)	(36)	(35)
단수	kg/10a	445	482	495	497	516	471
쌀생산농가	천호	1,205	1,098	1,064	1,078	1,054	985
총농가중쌀농가비중	%	80.3	77.7	77.9	77.9	77.8	77.0
농업조수입(A)	천원/호당	16,012	16,630	18,638	19,514	20,193	19,951
미곡조수입(B)		5,450	6,703	7,282	7,758	8,277	7,471
B/A	%	34	40.3	39.1	41.6	41.0	37.4
쌀농가판매가격	원/80kg	117,468	145,388	153,874	159,252	154,340	153,652
수매가격		132,680	145,580	152,860	161,270	167,720	167,720
(일반미, 1등급)							
호당평균수매대금	천원	2,053	2,687	3,076	3,515	2,982	2,470
(출하농가기준)							

연도별 재고량

(단위 : 천톤)

연 도	'80	'85	'88	'89	'90	'91	'93	'94	'95
연말재고	1,066	1,428	1,121	1,572	2,025	2,141	1,820	1,156	659
연 도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연말재고	244	497	806	722	978	1,335	1,447	1,576	

농가소득과 쌀 소득

	단위	'85	'90	'95	'98	'99	'00	'01	'02
농가소득(A)	천원	5,736	11,026	21,803	20,494	22,323	23,072	23,907	24,475
농업소득(B)	천원	3,699	6,264	10,469	8,955	10,566	10,897	11,267	11,274
농외소득	천원	2,037	4,762	11,334	11,539	11,757	12,175	12,640	13,201
쌀소득(C)	천원	1,824	3,097	3,984	4,826	5,316	5,671	6,050	5,289
농가소득대비(C/A)	%	31.8	28.1	18.3	23.5	23.8	24.6	25.3	21.6
농업소득대비(C/B)	%	49.3	49.4	38.1	53.9	50.3	52.0	53.7	46.9

※주 : '98년 조사 표본 변경

농외소득에는 이전수입이 포함됨

전체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천원)						
연도	농가소득(A)	농업소득(B)	쌀(C)	C/A	C/B	도시노동자 소득
'75	873	715	311	35.6	43.5	786
'80	2,693	1,755	741	27.5	42.2	2,809
'85	5,736	3,699	1,824	31.8	49.3	5,085
'90	11,026	6,264	3,097	28.1	49.4	11,320
'93	16,928	8,427	3,439	20.3	40.8	17,734
'94	20,316	10,315	4,048	19.9	39.2	20,416
'95	21,803	10,469	3,984	18.3	38.1	22,933
'96	23,298	10,837	5,329	22.9	49.2	25,832
'97	23,488	10,603	5,557	23.7	52.4	27,448
'98	20,494	8,955	4,826	23.5	53.9	25,597
'99	22,323	10,566	5,316	23.8	50.3	26,694
'00	23,072	10,897	5,671	24.6	52.0	28,643
'01	23,907	11,267	6,050	25.3	53.7	31,501
'02	24,475	11,274	5,289	21.6	46.9	33,509

쌀 10a당 수익성

(단위:원)

구 분	'94	'95	'97	'98	'99	'00	'01	'02
• 조수입(A)	679,450	736,874	927,879	931,663	993,278	1,041,183	1,047,305	968,623
- 주산물수입	659,357	715,364	904,127	906,569	970,380	1,018,170	1,026,029	947,516
(생산량)	(459)	(445)	(518)	(482)	(495)	(497)	(516)	(471)
- 부산물수입	20,293	21,510	23,752	25,094	22,898	23,013	21,276	21,107
• 생산비(B)	400,502	411,975	458,240	510,792	522,700	537,833	535,712	529,609
• 경영비(C)	188,522	197,947	228,147	261,162	268,059	280,478	281,729	282,570
• 순수익(A-B)	278,948	324,899	469,639	420,871	470,578	503,350	511,593	439,014
- 순수익율(A-B)/A	41.1	44.1	50.6	45.2	47.4	48.3	48.8	45.3
• 소득(A-C)	490,928	538,927	699,732	670,501	725,219	760,705	765,576	686,033
- 소득율(A-C)/A	72.3	73.1	75.4	72.0	73.0	73.1	73.1	70.8

쌀 생산비와 수매가격 추이

연 도	'90	'91	'92	'93	'94	'95	'96
10a 당 생산비(원)	376,178	389,633	387,195	385,543	388,658	399,949	431,142
10a 당 생산량(kg)	451	446	461	418	459	445	507
80kg 가마 당 생산비(원)	66,728	69,890	67,192	73,788	67,740	71,901	68,030
80kg 수매가격(원)(2등 기준)	106,390	113,840	120,670	126,700	126,700	126,700	131,770
수매가격에 대한 생산비 비율(%)	62.7	61.4	55.7	58.2	53.5	56.7	51.6
연 도	'97	'98	'99	'00	'01	'02	
10a 당 생산비(원)	446,510	497,034	510,650	525,945	535,712	529,609	
10a 당 생산량(kg)	518	482	495	497	516	471	
80kg 가마 당 생산비(원)	68,959	82,494	82,528	84,662	81,371	87,995	
80kg 수매가격(원)(2등 기준)	131,770	139,020	145,970	154,000	160,160	160,160	
수매가격에 대한 생산비 비율(%)	52.3	59.3	56.5	55.0	50.8	54.9	

2002년 추곡 시도별 수매실적

시도별	수매계획량 (당초배정)	총수매실적(D)	정부직접 수매량(A)	농협차액 수매량(B)	B중 산물 수매량(C)	산물수매 비중(C/D)
서울	6,500	6,350	-	6,350	-	-
부산	83,000	82,546	33,849	48,697	48,697	59.0
대구	116,000	116,000	68,725	47,275	47,275	40.8
인천	272,500	272,500	153,903	118,597	118,597	43.5
광주	231,000	231,000	138,916	92,084	92,084	39.9
대전	65,000	64,925	64,925	-	-	-
울산	125,000	125,000	55,301	69,699	51,150	40.9
경기	2,357,000	2,357,033	1,227,952	1,129,081	1,129,081	47.9
강원	1,140,000	1,140,000	564,735	575,265	575,265	50.5
충북	1,540,000	1,540,084	682,707	857,377	628,294	40.8
충남	4,680,000	4,680,385	2,250,457	2,429,928	1,685,550	36.0
전북	4,355,500	4,355,637	2,094,254	2,261,383	1,558,913	35.8
전남	5,782,500	5,823,306	2,870,557	2,952,749	1,979,175	34.0
경북	3,825,000	3,867,339	2,105,040	1,762,299	1,056,025	27.3
경남	2,810,000	2,811,985	1,468,127	1,343,858	851,225	30.3
제주	6,000	6,000	150	5,850	-	-
계	27,395,000	27,480,090	13,779,598	13,700,492	9,821,331	35.7
석(정곡)	27,405,000	5,496,018	2,755,920	2,740,098	1,964,266	

세계 쌀 생산현황(생산량)

유통연도	1990/91	1995/96	1999/' 00	2000/' 01	2001/' 02	2002/' 03	2003/' 04	증감률
수확면적(천ha)	146,700	148,036	155,140	151,457	150,950	145,700	149,410	2.5
단수(톤/ha, 정곡)	2.4	2.51	2.63	2.63	2.64	2.61	2.61	0.2
생산량(천톤)	352,000	370,928	408,674	397,938	398,566	380,269	390,645	3
국별생산량(천톤)								
중국	132,532	129,650	138,936	131,536	124,306	122,180	118,000	-3.4
인도	74,291	79,620	89,700	84,871	93,080	75,700	89,000	17.6
인도네시아	29,042	33,215	32,800	32,960	33,089	33,200	33,540	1
방글라데시	17,852	17,687	23,066	25,086	24,310	25,360	26,000	2.5
베트남	12,393	17,683	20,926	20,473	21,036	21,330	21,000	-1.5
태국	11,347	14,388	16,500	17,057	17,499	17,124	17,800	3.9
일본	9,554	9,781	8,350	8,636	8,242	8,089	7,100	-12.2
한국	5,606	4,694	5,263	5,291	5,515	4,927	4,451	-9.7
미국	5,098	5,628	6,502	5,941	6,714	6,536	6,204	-5.1
호주	563	691	787	1,258	888	279	644	130.8
EU	1,606	1,315	1,761	1,576	1,634	1,716	1,636	-4.7
기타	52,116	56,576	64,083	63,253	62,253	63,828	65,222	2.2

국제 쌀 가격동향

(단위: FOB, US\$/톤)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밀	136	165	140	146	174	188	153	120	122	150
옥수수	108	104	102	107	120	159	118	103	92	92
대 두	221	221	240	240	235	288	292	234	186	194
쌀										
미국장립중	379	402	394	499	397	468	421	431	501	432
태국장립중	350	323	318	423	373	416	306	310	256	212

- 밀 : US Portland 백밀1등급
- 미국쌀 : US 캘리포니아 중립중 1등급
- 옥수수 : 콩: US Gulf 등급
- 태국쌀 : 장립중 1등급

곡류별 주요국의 교역현황(2002/2003)

(단위 : 백만톤, %)

구분	국 별	쌀	비중	콩	비중	옥수수	비중	밀	비중
수	계	26.67	100	46.89	100	75.30	100	104.15	100
	알제틴	0.35	1.3	17.52	37.4	9.00	11.9	8.50	8.2
	호주	0.30	1.1	-	-	-	-	7.00	6.7
	캐나다	-	-	-	-	-	-	8.50	8.1
	중국	2.25	8.4	-	-	10.00	13.3	-	-
	파키스탄	1.10	4.1	-	-	-	-	-	-
	태국	7.75	29.1	-	-	-	-	-	-
출	브라질	-	-	13.45	28.7	-	-	-	-
	EU	0.61	2.3	6.03	12.8	0.10	0.1	15.50	14.9
	미국	3.40	12.8	5.63	12.0	49.00	65.1	26.00	25.0
	베트남	4.25	15.9	-	-	-	-	-	-
	기타	6.66	25.0	4.26	9.1	7.20	9.6	38.65	37.1
	계	26.67	100	46.89	100	75.30	100	104.15	100
	중국	0.30	1.1	9.14	19.5	0.10	-	1.00	1.0
입	이란	1.50	5.6	-	-	1.20	1.6	3.00	2.9
	이라크	1.10	4.1	-	-	-	-	3.00	2.9
	일본	0.65	2.4	-	-	15.50	20.6	5.80	5.6
	사우디	1.00	3.8	-	-	1.40	1.9	-	-
	EU	0.85	3.2	21.24	45.3	2.50	3.3	8.00	7.7
	브라질	0.80	3.0	-	-	0.40	0.5	6.70	6.4
	한국	0.15	0.6	-	-	8.50	11.3	3.80	3.6
입	이집트	-	-	1.30	2.8	5.20	6.9	6.20	5.9
	말레이시아	0.60	2.3	-	-	2.40	3.2	1.35	1.3
	러시아	0.35	1.3	-	-	0.60	0.8	0.50	0.5
	기타	19.37	72.6	15.21	32.4	37.50	49.8	64.80	62.2

※주 : USDA grain : Market & Trade(2002, 12)

USDA oilseed : World Market & Trade(2002, 12)

식량자급도(사료용 제외)

(단위:%)

	전 체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薯類)	기 타
'65	98.8	100.7	117.8	27.8	77.8	108.7	117.6	101.5
'70	86.1	93.1	115.1	15.9	82.9	92.3	122.7	100.8
'75	79.1	94.6	96.3	5.8	25.7	97.8	133.1	109.0
'80	69.6	95.1	62.2	4.8	27.1	64.3	111.2	98.9
'85	71.6	103.3	89.6	0.5	15.5	62.7	111.1	52.6
'89	70.8	108.1	118.9	0.1	7.4	59.5	108.5	100.0
'90	70.3	108.3	97.4	0.05	8.2	64.9	101.2	79.7
'91	64.1	102.3	74.3	0.05	7.4	58.7	106.0	35.7
'92	60.7	97.5	82.6	0.05	4.4	50.6	115.6	36.0
'93	61.3	96.8	74.9	0.05	5.6	48.9	110.8	33.6
'94	52.7	87.8	51.0	0.10	4.7	41.2	103.3	23.6
'95	55.7	93.6	67.6	0.47	5.0	37.0	108.6	19.9
'96	52.4	89.9	74.4	0.5	3.9	36.5	110.4	25.0
'97	58.0	105.0	53.6	0.3	3.6	36.2	110.0	23.4
'98	57.6	104.5	58.6	0.2	4.2	33.6	110.2	21.2
'99	54.2	96.6	71.4	0.3	3.9	29.4	109.7	23.5
2000	55.6	102.9	49.7	0.1	3.7	28.2	110.8	18.9
2001	56.8	102.7	77.2	0.1	3.1	28.1	110.4	18.1
2002	58.3	107.0	61.9	0.3	2.8	28.5	110.0	19.1
2003(전망)	51.3	99.0	49.2	0.2	3.0	27.6	109.8	14.5

※주 : 쌀의 자급도 산정 시 대북지원용은 제외

곡물자급도(사료용 포함)

(단위:%)

	전 체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薯類)	기 타
'65	93.9	100.7	106.0	27.0	36.1	100.0	100.0	100.0
'70	80.5	93.1	106.3	15.4	18.9	86.1	100.0	96.9
'75	73.0	94.6	92.0	5.7	8.3	85.8	100.0	100.0
'80	56.0	95.1	57.6	4.8	5.9	35.1	100.0	89.8
'85	48.4	103.3	63.7	0.4	4.1	22.5	100.0	11.6
'89	43.0	108.1	114.2	0.1	1.8	19.4	98.0	10.1
'90	43.1	108.3	97.4	0.05	1.9	20.1	95.6	13.9
'91	37.6	102.3	74.3	0.02	2.2	19.4	95.9	16.6
'92	34.1	97.5	82.6	0.02	1.2	12.2	103.4	13.1
'93	33.8	96.8	74.9	0.03	1.4	13.8	99.6	12.9
'94	28.0	87.8	51.0	0.03	1.4	12.6	93.6	10.4
'95	29.1	93.6	67.0	0.30	1.1	9.9	98.4	3.8
'96	26.4	89.9	73.5	0.4	0.8	9.9	99.6	3.4
'97	30.4	105.0	49.3	0.2	0.9	8.6	99.2	6.5
'98	31.4	104.5	56.8	0.1	1.1	9.4	99.5	16.4
'99	29.4	96.6	66.6	0.1	1.0	9.1	98.8	11.0
2000	29.7	102.9	46.9	0.1	0.9	6.4	99.3	5.2
2001	31.1	102.7	77.2	0.1	0.8	7.7	99.1	11.1
2002	30.4	107.0	60.4	0.2	0.7	7.3	99.1	10.2
2003(전망)	27.0	99.0	45.5	0.1	0.8	6.9	98.7	11.8

※주 : 쌀의 자급도 산정 시 대북지원용은 제외

‘02년도 주요곡물 수입실적 ①

(단위:천톤, 천달러)

곡종	구분	계		미국		중국		태국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쌀	가공용	154	49,630	36	12,378	95	32,287	23	4,965
밀	제분용	2,304	383,997	1,222	199,279	-	-	-	-
	사료용등	1,539	156,080	-	-	436	44,580	-	-
	계	3,843	540,077	1,222	199,279	436	44,580	-	-
옥수수	가공용	2,186	245,889	72	10,135	830	88,405	-	-
	사료용	6,366	669,929	985	106,457	4,020	417,390	-	-
	계	8,552	915,818	1,057	116,592	4,850	505,795	-	-
콩	식용	283	61,980	237	53,618	44	7,643	-	-
	착유·사료용	1,162	242,667	969	204,947	-	-	-	-
	계	1,445	304,647	1,206	258,565	44	7,643	-	-
기타	가공용	527	147,147	5	3,910	89	24,951	20	7,344
	사료용	212	18,528	-	-	16	2,272	42	3,209
	계	739	165,675	5	3,910	105	27,223	62	10,553
계	가공용	5,454	888,643	1,572	279,320	1,058	153,286	43	12,309
	사료용등	9,279	1,087,204	1,954	311,404	4,472	464,242	42	3,209
	계	14,733	1,975,847	3,526	590,724	5,530	617,528	85	15,518

※주: 1) 기타 품목은 맥주보리, 맥아, 팥, 녹두, 완두, 강남콩, 전분류, 곡분류 메밀, 호밀, 귀리, 수수, 조, 기장·피, 고구마, 타피오카, 기타서류, 기타곡물임

2) 제외품목 : 땅콩, 곡물박류, 외화획득용 원자재(참쌀), 가공용

3) 양곡년도 기준(양곡년도 : 전년 11.1~당년 10. 31), 금액은 C&F기준임.

4) 쌀은 현미 CIP기준

주요 곡물 수입실적 ②

(단위:천톤, 천달러)

곡종	구분	호주		캐나다		EU		기타국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쌀	가공용	-	-	-	-	-	-	-	-
밀	제분용	940	156,166	142	28,552	-	-	-	-
	사료용등	83	8,220	-	-	596	59,043	424	44,237
	계	1,023	164,386	142	28,552	596	59,043	424	44,237
옥수수	가공용	12	1,951	-	-	-	52	1,272	145,346
	사료용	-	-	-	-	-	-	1,361	146,082
	계	12	1,951	-	-	-	52	2,633	291,428
콩	식용	-	-	-	-	-	-	2	719
	착유·사료용	-	-	-	-	-	-	193	37,720
	계	-	-	-	-	-	-	195	38,439
기타	가공용	180	44,864	39	10,423	71	38,561	123	17,094
	사료용	1	72	-	47	130	10,260	23	2,668
	계	181	44,936	39	10,470	201	48,821	146	19,762
계	가공용	1,132	202,981	181	38,975	71	38,613	1,397	163,159
	사료용	84	8,292	-	47	726	69,303	2,001	230,707
	계	1,216	211,273	181	39,022	797	107,916	3,398	393,866

1인 1일당 공급에너지 ①

	계	곡류	쌀	밀가루	보리	기타	서류	설탕류	두류
	Kcal								
'68	2,276	1,793	1,097	269	389	38	171	48	71
'70	2,370	1,818	1,215	243	335	25	180	68	85
'75	2,390	1,801	1,116	292	361	32	129	57	90
'80	2,485	1,730	1,234	284	129	83	65	112	103
'85	2,687	1,798	1,245	307	85	161	37	124	115
'86	2,746	1,804	1,246	302	70	186	37	137	113
'87	2,810	1,796	1,262	316	49	170	34	162	109
'88	2,814	1,788	1,234	325	41	187	27	165	113
'89	2,825	1,764	1,211	309	29	215	30	164	115
'90	2,853	1,697	1,175	285	22	215	27	162	112
'91	2,876	1,731	1,178	300	19	234	24	171	105
'92	2,912	1,723	1,155	312	17	238	29	174	100
'93	2,972	1,671	1,140	287	25	219	34	167	97
'94	2,950	1,698	1,129	312	23	234	29	184	112
'95	2,959	1,660	1,054	343	18	245	29	188	117
'96	2,948	1,648	1,035	340	21	253	38	179	119
'97	2,957	1,636	1,006	339	19	273	40	180	116
'98	2,819	1,608	981	348	23	256	34	160	123
'99	2,968	1,611	959	361	19	272	39	182	129
'00	3,009	1,664	997	363	17	287	29	188	116
'01	2,992	1,577	945	346	19	267	22	210	109

1인 1일당 공급에너지 ②

	건과류	종실류	채소류	과실류	육 류	계란류	우유류	어패류	해조류	유지류
'68	0	1	48	12	48	9	3	36	7	29
'70	0	1	53	14	49	14	3	40	10	33
'75	0	13	57	19	50	17	6	66	15	66
'80	2	7	119	22	91	26	23	61	2	123
'85	4	7	87	32	100	28	40	92	5	227
'86	4	7	98	32	101	31	44	101	8	230
'87	3	8	107	31	117	34	57	93	5	255
'88	3	11	105	35	125	37	66	78	6	255
'89	3	9	116	42	133	35	59	87	5	264
'90	2	9	116	34	143	36	64	92	4	352
'91	4	17	107	45	151	32	64	87	6	334
'92	4	19	113	49	167	31	68	87	8	337
'93	5	28	118	44	175	36	69	95	10	322
'94	6	31	117	45	181	35	65	100	11	337
'95	10	19	127	53	189	37	74	99	9	346
'96	8	10	117	51	197	38	83	105	7	350
'97	10	11	118	55	200	38	80	94	9	369
'98	8	13	116	46	197	36	76	82	6	314
'99	8	9	126	53	207	36	92	91	6	380
'00	9	10	126	54	201	37	92	87	5	391
'01	9	9	123	54	206	41	103	107	5	417

주요 곡물류 수입 관세율 내역

(단위:%)										
곡 종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쌀	5	5	5	5	5	5	5	5	5	5
보 리	356.4or 358원/kg	352.8or 355원/kg	349.2or 351원/kg	345.6or 348원/kg	342.0or 344원/kg	338.4or 340원/kg	334.8or 337원/kg	331.2or 333원/kg	327.6or 330원/kg	324.0or 326원/kg
밀	2.9	2.76	2.64	2.52	2.40	2.28	2.16	2.04	1.92	1.80
옥 수 수	361.3	357.6	353.9	350.2	346.5	342.8	339.1	335.4	331.7	328.0
콩	535.6or 1,051원/kg	530.2or 1,041원/kg	524.8or 1,030원/kg	519.4or 1,020원/kg	514.0or 1,009원/kg	508.6or 998원/kg	503.2or 988원/kg	497.8or 977원/kg	492.4or 967원/kg	487.0or 956원/kg
팥	462.8	458.2	453.5	448.8	444.2	439.5	434.8	430.1	425.5	420.8
녹 두	668.3	661.5	654.8	648.0	641.3	634.5	627.8	621.0	614.3	607.5
수 수	-	3	3	3	3	3	3	3	3	3
호 밀	-	3	3	3	3	3	3	3	3	3
귀 리	-	3	3	3	3	3	3	3	3	3
조	-	3	3	3	3	3	3	3	3	3
메 밀	281.7	278.8	276.0	273.1	270.3	267.5	264.6	261.8	258.9	256.1
맥주맥	564.3	558.6	552.9	547.2	541.5	535.8	530.1	524.4	518.7	513.0
변성전분 (전분과이눌린)	424.3	420.0	415.7	411.4	407.2	402.9	398.6	394.3	390.0	385.7

3) UR관련자료

주요 곡종별 UR협상결과

품목별	타결내용
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화 유예('95~2004), 최소시장 접근허용 (M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이후 관세화 문제는 2004년에 재협의 • 물량 및 세율 : ('95)51,307(5%) → (2004) 205,228톤(5%) • 보조금 감축 : 2004년 까지 AMS의 13.3% 감축
맥주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상당치 부과 후 수입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570% → (최종) 513% • 수입물량(CMA 기준) 및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주맥 : ('95) 30,000톤 (30%) → (2004) 30,000(30%) - 맥 아 : ('95) 40,000톤 (30%) → (2004) 40,000(30%)
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상당치 부과 후 수입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541% → (최종) 487% • 수입물량(CMA 기준) 및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1,032톤(5%) → (2004) 1,032(5%)
옥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상당치 부과 후 수입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365% → (최종) 328% • 수입물량(CMA 기준) 및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6,102톤(3%) → (2004) 6,102(3%)

■ 쌀 MMA 물량 최종협상 결과

- 기준년도 : '88~'90 (당초 : '86~'88)
- 소비량 기준 : 식량용 소비량 (가공용, 감모, 종자 등 제외)
- MMA 물량
 - '95~'99 : 1~2% (매년 0.25%씩 증가)
 - 2000~2004 : 2~4% (매년 0.5%씩 증가)

연도별 쌀 소비량

(단위:천톤(만석))

	'86	'87	'88	'89	'90	'86~'88 평균	'88~'90 평균
총소비량	5,805 (4,031)	5,617 (3,902)	5,611 (3,897)	5,602 (3,891)	5,445 (3,780)	5,678 (3,943)	5,553 (3,856)
식량용	5,308 (3,686)	5,247 (3,644)	5,129 (3,562)	5,145 (3,573)	5,127 (3,561)	5,288 (3,361)	5,134 (3,565)

연도별 MMA 도입물량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도입량	51천톤/정곡 (35만석)	64 (44)	77 (53)	90 (63)	103 (72)	103 (72)	128 (89)	154 (107)	180 (125)	205 (142)
MMA비율	1%	1.25	1.5	1.75	20.0	20.0	2.5	3.0	3.5	4.0

■ AMS 분야

총괄 AMS

(단위:10억원)

총감축기준 보조액	연도별 및 최종지원 상한수준	비 고
(BASE TOTAL AMS)	(1995~2004)	
1,718.6	1995 : 1,698.74 (2,182.55)	
	1996 : 1,672.90 (2,105.60)	
	1997 : 1,650.03 (2,028.65)	
	1998 : 1,627.17 (1,951.70)	
	1999 : 1,604.32 (1,874.75)	
	2000 : 1,581.46 (1,797.80)	
	2001 : 1,558.60 (1,720.85)	
	2002 : 1,535.74 (1,643.90)	
	2003 : 1,512.89 (1,566.95)	
	2004 : 1,490.00 (1,490.00)	

※ 주 : ① 총 감축 기준보조액은 '89~'91 기준년도 AMS임.

② () 내 수치는 최근 년도 쌀 AMS를 감안한 연도별 감축 약속상한 수준임.

품목별 AMS (쌀)

품 명 (기초농산물)	관리가격	외 부 참조가격	수혜물량	총시장가격 지 지	비고
1	2	3	4	5	6
				$\{(2-3) \times 4\}$	
쌀	천원/톤	천원/톤	천톤	10억원	- 쌀의 경우 감축기준
1989	1,245.8		1,691.7	1,782.8	은 1993실적을 사용
1990	1,340.6	191.9	1,203.4	1,382.3	- 최종감축 이행은
1992	1,451.7		1,222.4	1,540.0	'89~'91 총 AMS에
(평균)				(1,568.4)	서 13.3% 감축한 수
1993	1,652.1	183.9	1,436.7	2,109.3	준 약속
(BASE AMS)				2,109.3	

국민과 함께 하는 2004 쌀 협상

- 2004년 4월 인쇄
- 2004년 4월 발행
- 발행 | 농림부
- 기획 | 편집 | 인쇄 | (주)지니릴레이션
(Tel.02.336.0447)

[비매품]



농림부

국제협력과

쌀협상 국민참여 지원팀 (<http://rice.maf.go.kr>)

이 자료는 농업 관련 국제협상(UR/DDA)과 2004 쌀 협상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는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